

제6차 저출산대책포럼

-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14:00~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2층)
- 주최: 저출산대책포럼
- 후원: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6차 저출산대책포럼

- 일시: 2009년 12월 3일(목) 14:00~18:00
- 장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본관2층)
- 주최: 저출산대책포럼
- 후원: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시는 말씀

우리 사회에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가장 급격한 속도의 고령화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한 이후 벌써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2010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서두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출산대책포럼이 관련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창립된지도 어느덧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도전을 두고 많은 사회적, 정책적 이슈들이 회자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에 앞서 그 동안의 저출산대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기간의 정책 시행으로 정확한 정책 효과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출산력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원인분석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저출산대응정책이 시급히 마련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출산대책포럼은 그동안 다섯 차례의 포럼을 운영하면서 학제간 소통을 통해 저출산 현상과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제6차 포럼에서는 출산과 양육에 관한 네 편의 연구 발표가 이루어지길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출산대책포럼의 역할과 발전을 주제로 하는 집담회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새로운 연구결과와 학술정보를 함께 나누시고,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김 두 섭

진행 순서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식**

개회사: 김두섭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격려사: 이상영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장)

14:20 ~ 16:00 **주제발표**

좌장: 박상태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발표 1: 여성의 결혼과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이경혜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

발표 2: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최은영 (통계개발원 사무관)

발표 3: 저출산 시대의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우남희 (동덕여대 아동학과 교수)

발표 4: 저출산 대책과 아동보육 문제
이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16:00 ~ 16:10 **Coffee Break**

16:10 ~ 16:40 지정토론

김정석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6:40 ~ 17:40 집담회: 저출산대책포럼의 역할과 발전

좌 장: 김두섭 (저출산대책포럼 위원장)

김용수(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

김정호(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수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영란(강남대 실버산업연계전공학부 교수)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유계숙(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광자(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이승욱(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성남(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7:40 ~ 18:00 종합토론 및 폐회

발표 1

여성의 결혼과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이경혜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교수]

여성의 결혼과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이경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출산률의 저하는 개인과 가족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1.19로 일본, 독일 영국 등 OECD 국가 중 출산률 감소가 가장 빠르다(e나라지표, 2009). 출산률의 변화추이는 2005년에 1.08로 가장 낮았으나, 2007년 1.25로 다소 올라가는 듯 했으나 2009년 다시 1.19로 낮아졌다. 2005년의 1.08보다 2009년의 1.19가 더 심각한 것은 저출산정책에 대한 국가의 대책이 2006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9년도 예산은 2008년에 비해 24.8%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보건복지부의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임신 출산 지원과 보육지원, 조세 및 사회보험 지원 등이 프랑스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출산률이 다시 1.19로 낮아진 것은 정책이나 지원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여성으로 하여금 아기를 낳지 못하게 혹은 낳지 않게 하는 것일까? 저출산문제를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여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저출산문제를 경제적 정치적 차원으로만 접근하였지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저출산과 고령인구대책’ 이라고 하여 저출산을 고령인구와 함께 해결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여성과 아이를 노동생산성과 고령인구를 부양할 경제적, 사회적도구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는 여성이 낳는다. 아무리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여도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출산율은 올라 갈 수가 없다. 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가 아니다. 출산을 위해서는 먼저 여성이 건강해야 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여건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이 생각하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왜 안 낳거나 못 낳는지? 출산이 늦을 때 올수 있는 건강문제를 알고 있는지? 등 출산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출산은 결혼한 여성이 하는 것이 사회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결혼시기와 결혼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혼전임신은 낙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결정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결혼 및 출산과 관련하여 가임기여성의 교육 및 상담과 국가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각 요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이 적정시기에 결혼 및 출산을 하도록 돕는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 자료를 제공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국가정책의 계획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출산률 증가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이 원하는 결혼 및 출산시기를 확인한다.
2. 여성이 결혼 및 출산을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를 확인한다.
3. 출산시기가 여성 및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여성의 인식을 파악한다.
4. 여성이 원하는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확인한다.
5. 여성의 결혼 및 출산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성의 결혼 및 출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조사 및 서술연구이다.

2.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20-50세의 가임여성 300명이다. 그러나 자료로서 불충분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분석대상이 된 대상자는 219 명이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참고문헌과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 보시연의 정책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기혼여성과 미혼여성,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과 자녀를 갖지 않는 기혼여성이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결혼과 출산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지원에 대한 질문은 대상 여성 모두 답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5문항, 미혼여성을 위한 6문항 기혼여성을 위한 10문항,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을 위한 2문항, 미혼 기혼여성 모두가 답할 수 있는 문항 10문항, 자녀에 대한 가치관 11문항으로 총 44문항이다.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 검정은 여성건강전공 교수와 박사과정학생들에 의해 내용타당도를 검정하였으며 가입여성 30명에게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 문항의 적합성과 이해도 소요시간을 검정하였다.

자녀에 대한 가치관 도구의 구성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과 부정적인 가치관을 질문하는 11개 문항으로 5단계 Likert 형식이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에서 부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한다.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검정을 위하여 전문가의 안면타당도 검정을 하였으며 통계적인 신뢰도 검정에서는 Chronbach Alpha .78이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10~15분이 소요되었다.

4. 윤리적 고려

본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작성하도록 고안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여성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설문지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informed consent)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설문지의 내용은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연구가 끝난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여성은 미혼여성이 134명(61.2%) 기혼여성이 85명(38.8%), 총 219명이다.

연령분포는 최소 20세 최대 50세이며 평균 28.9(SD 7.12)세이다. 미혼여성은 최하 20세 최고 42세, 평균24.8(SD 4.72)세이며 기혼여성은 최하 24세 최고 45세 평균 35.4(SD 5.23)세이다.

교는 기독교 74명(33.8%), 천주교 43명(19.6%), 불교 19명(8.7%), 기타 4명(1.80%)이며 종교가 없는 대상자가 79명(36.1%)이었다. 교육정도는 고졸이 98명(44.7%), 대졸이 74명(33.8%), 대학원 이상이 47명(21.5%) 이었다.

대상여성의 직업은 학생 82명(37.8%)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이 68명(31.2%), 회사원 38명(17.5%), 가정주부13명(6.0%)의 순으로 많으며 그 외 자영업/판매업 3명(1.4%), 서비스업 1명(0.5%), 일일 근로직 4명(1.8%), 순이며 무직이 4명(1.8%), 기타 4명(1.8%)이다. 기혼여성 남편의 직업은 회사원이 45명(51.7%)으로 가장 많으며, 자영업/판매업 21명(24.1%), 공무원 9명(10.3%), 전문직 6명(6.9%)이다. 그 외 서비스업, 일일근로직이 각 1명(1.1%), 기타 3명(3.4%) 이다.

대상여성의 소득은 100만원 미만 32명(14.7%), 100-150만원 미만 26명(11.9%), 150-200만원 미만 18명(8.3%), 200-250만원미만이 38명(17.4%), 250-300만원 미만 12명(5.5%), 300만원 이상 23명(10.1%)이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70명(32.1%)이나 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상자중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많기 때문이다. 남편의 수입은 300만원 이상이 48명(54.5%)이며 250-300만원 미만 16명(18.2%), 200-250만원 미만 12명(13.6%), 150-200만원 미만 8명(9.1%), 100-150만원 미만 3명(3.4%), 100만원 미만이 1명(1.1%)으로 여성의 소득 보다는 높으며 300만원 이상이 반수이상을 차지하고 200만원 이하는 12명(13.6%)에 불과하여 대부분 중산층임을 알 수 있다(표 1).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수	범주	평균(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나이(년)	전체	28.89(7.12)		
	미혼	24.80(4.72)		
	기혼	35.40(5.23)		
종교	기독교		74	33.8
	천주교		43	19.6
	불교		19	8.7
	기타		4	1.8
	없음		79	36.1
학력	고졸 이하		98	44.7
	대졸		74	33.8
	대학원 이상		47	21.5
결혼상태	미혼		134	38.8
	기혼		85	61.2

〈표 1〉 계속

변수	범주	평균(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직업*	전문직		68	31.3
	회사원		38	17.5
	서비스업		1	0.5
	자영업/판매업		3	1.4
	일일근로직/파트타임		4	1.8
	학생		82	37.8
	가정주부		13	6.0
	기타		4	1.8
본인의 소득 정도*	무직		4	1.8
	100만원 미만		32	14.7
	100-150만원 미만		26	11.9
	150-200만원 미만		18	8.3
	200-250만원 미만		38	17.4
	250-300만원 미만		12	5.5
	300만원 이상		22	10.1
남편의 소득 정도** (n=85)	소득없음		70	32.1
	100만원 미만		1	1.2
	100-150만원 미만		3	3.5
	150-200만원 미만		8	9.4
	200-250만원 미만		12	14.1
	250-300만원 미만		16	18.8
	300만원 이상		45	52.9

2. 결혼 및 출산시기

미혼여성이 원하는 결혼시기는 최하 24세 최고 41세 평균 29.4세(SD 2.94)이며, 출산시기는 최하 26세 최고 42세 평균 30.3세이다. 이 연령은 30세 이상 여성 19명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올라갔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여성들이 30세 전에 결혼과 출산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0세 이상 여성들은 원하는 결혼시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대상여성들이 응답하는 이상적인 출산시기는 27.4(SD 1.92)세이며 최하 23세 최고 35세였다. 연령별로는 26-30세라고 응답한 여성이 167명(87.7%)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23-25세(38명,18.6%), 31-35세(8명,3.7%)로 대부분이 30세 이전에 출산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대상자 중 미혼여성이 원하는 출산 시기는 최소 26세, 최대 42세 평균 30.3(SD2.9)세 이다.

결혼과 출산시기와의 관계를 보면 평균 결혼후 1.6년 후에 출산하기를 원하였는데 그 이유는 ‘결혼생활에 적응된 후에’(42명, 37.5%)가 가장 많으며 ‘신혼생활을 즐기기 위해서’가 다음으로

30명(26.8%)이 응답하였다. 그러나 ‘아기를 빨리 갖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여성이 13명(11.6%)이었는데 이들은 결혼 직후 바로 임신 출산하기를 원하였다. 그 외 직장생활이 안정된 후(6명, 5.4%), 학업이 끝난후(4명, 3.6%), 집장만/자녀교육비 마련후(4명, 3.6%)는 소수였다.

한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첫아이 출산연령을 알아본 결과 평균 28.3세(SD3.95)이며 원하는 자녀수는 최소 1명 최대 4명으로 평균 1.96명(SD 0.59)이었다. 기혼여성 응답자 중 둘째아이를 가졌거나 가지기를 원하는 여성이 61명(80.3%)이며 원하지 않는 여성은 15명(19.7%)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30세 이전에 2명 정도의 자녀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녀에 대한 가치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알아보기 위해 자녀에 대한 대상자들의 생각을 알아본 결과 평균 3.43(SD .55)점으로 긍정적이었다. 이중 가장 높은 것이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있는 일이다’(4.64)이며, 가장 낮은 것은 ‘자녀는 나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2.72, SD1.01),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2.78 SD1.11) 로 자녀를 갖는 것이 수단이나 목적보다는 부모가 되는 것 자체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표 2).

〈표 2〉 자녀에 대한 가치관

문항	평균	표준편차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4.64	0.66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4.35	0.77
3. 자녀가 있는 사람은 노년에 덜 외롭다.	4.20	0.92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03	0.98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2.78	1.11
6.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3.25	1.16
7. 자녀는 나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	2.72	1.01
8. 자녀는 나의 자아성취에 제약이 된다.	3.09	1.05
9. 자녀는 나의 직업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3.19	1.06
10. 자녀를 갖는 것은 나의 체력을 허약하게 한다.	3.32	1.09
11. 자녀를 갖는 것은 나의 신체이미지(몸매)를 손상시킨다.	3.29	1.15
총점	3.43	0.55

4.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이유

미혼여성 응답자 134명의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한 이유를 알아본 결과 이중응답을 포함하여 가장 많은 응답이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62명)이며, 다음이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55명), ‘결혼상대가 없어서’(42명)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결혼자금마련을 위해’(18명), ‘직장생활 지속을 위해’(6명), ‘가족부양(3명)의 이유는 소수였다. 그러나 독신이 좋아서도 4명이나 되었다.

연령분포별로 결혼을 못한 혹은 안한 이유를 살펴보면 24세 이하 미혼여성 134명중 54명이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 라고 응답하였고 36명이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19명이 ‘결혼상대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4세 이하의 미혼여성은 대부분이 학생이고 아직 연령이 적기 때문에 결혼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적령기인 25-29세 여성이 결혼을 못하거나 안한 이유는 ‘결혼상대자가 없어서’가 16명,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30-34세도 ‘결혼상대자가 없어서’가 4명,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4명,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 4명으로 나타났다. 35세 이상은 결혼상대가 없어서가 4명이며, ‘아직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2명, 그 외 ‘독신이 좋아서’, ‘결혼자금 마련’이 각 1명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혼여성이 결혼을 못하거나 안하는 이유는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결혼상대가 없어서’가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는 주로 24세 이하 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결혼적령기 여성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는 이유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서’와 ‘결혼상대가 없어서’로 압축된다.

5. 아기를 원하지 않거나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

미혼여성 중 결혼 후 아기를 원하는 여성이 116명(86.6%), 원하지 않는 여성이 18명(13.4%)이었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가 11명(61.1%)으로 많고 25세-29세가 4명(22.2%), 30-34가 3명(16.7%)이며 35세 이상은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어릴수록 자녀를 원하지 않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아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혼여성의 아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면 ‘직업과 자기발전에 방해가 되므로’(7명)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와 ‘아기를 싫어하므로’가 각 3명,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와 ‘부모노릇 할 자신이 없어서’가 각 1명으로 아기를 낳지 않으려는 여성은 아기보다 자신의 직업과 자기발전을 더 우선하였다.

기혼여성이 자녀가 없는 이유를 들어보면 응답자 15명중 ‘나이가 많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가 4명(28.6%)으로 가장 많고 ‘부부 중 한사람이 불임으로’ 2명(14.3%),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을 할 수 없음’, ‘부부간의 불화로 떨어져 있어 임신할 수 없음’,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음’이 각 1명(7.1%)이었으며 기타가 5명(35.7%)이었다. 기타에는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 ‘부부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위해’, ‘천천히’ ‘앞으로 가질 예정’ 이라고 응답하여 ‘나이 많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 ‘부부중 한사람이 불임’, ‘이유없이 임신이 되지않는다’ 를 합하면 전체의 50%가 불임이나 불임가능성으로 임신-출산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 중 둘째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이유는 ‘교육비와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가 33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돌봐줄 사람이나 맡길 곳이 없어서’(15명)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12명)였다. 그 외 ‘건강상의 이유’가 5명이며 ‘더 이상 필요 없으므로’ 가 4명, 기타가 4명이었다. 기타에는 둘째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보다는 낳을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있는 데 ‘하늘에 맡김’, ‘아이가 생기지 않음’, ‘나이가 많아서’, ‘불임’, 등의 이유로 둘째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 중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 경우가 44명(5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남편 18명(21.4%), 본인17명(20.2%)으로 비슷하며 시부모(2명, 2.4%), 친정부모(1명, 1.2%), 친척/친구(1명, 1.2%)는 소수였다. 이러한 결과로 출산은 부부가 함께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출산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기혼여성에게 자녀출산에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무엇이었느냐 는 질문에 대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28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임신 출산의 어려움 17명, 자녀교육/사교육비 부담 17명, 경제적 능력 15명, 자녀양육 능력 11명, 탁아시설 지원 없음 9명이며 그 외 사회적/국가적 지원 없음(5명), 건강(4명), 남편이 도와주지 않음(3명)을 들고 있다.

6. 여성의 임신 출산시기에 따른 건강문제에 대한 인식

대상여성들에게 임신과 출산이 늦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건강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미혼 여성은 115명이 응답하였는데 다중응답을 고려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게 나쁠 것 같다’, ‘건강문제’, ‘아기가 위험 할 수 있다’ 라고 막연하게 응답한 경우가 55명이며, ‘다운 증후군 위험’, ‘기형아 출산’, ‘임신 합병증’, ‘수술 위험’ 등 구체적으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문제를 지적한 경우는 42명이며, 자녀의 양육과 교육문제, 노후문제, 부모와의 세대차이 등 가족적인 문제라고 응답한 경우가 24명이었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6명이 있었다.

기혼여성의 경우는 74명이 응답하였는데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노후가 힘들다’, ‘체력이 달릴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와 ‘교육문제’, ‘뒷바라지가 힘들고 양육의 어려움이’ 있다 등 가족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응답한 경우가 3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산모의 임신중 합병증이나 유산, 조산, 난산, 아기의 기형문제를 언급한 경우는 15명에 불과했으며 별문제 없다는 응답도 4명이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상여성들은 출산이 늦어지면 막연히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을 뿐 나이와 임신율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였다.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중 임신과 출산에 따른 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자가 24명(29.3%)이며 없었다는 응답자가 58명(70.7%)이었다. 건강문제가 있었다는 응답자에게 어떤 건강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본 결과 유산이 8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심한 입덧 6명, 난산과 제왕절개 분만이 4명, 조기진통이 4명, 산후회복이 늦음이 3명 이었다. 그 외 임신 중독증, 임신성 당뇨, 인공수정 등이 각 각 2명이며 산후 출혈, 조산, 저체중아 분만, 신생아상태 나쁨이 각 각 1명, 기타가 5명 이었다.

7.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사회와 국가의 지원

1) 출산장려지원금

국가나 사회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돕기 위한 지원으로 출산장려 지원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안다’는 응답자가 173명(79.7%), ‘모른다’는 응답자가 44명(20.3%)으로 대부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중 ‘받아본 적이 없어 모르겠다’는 응답자가 36명(42.3%)로 많으며 ‘도움이 안 된다’가 31명(36.5%),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18명(21.2%) 에 불과하였다.

2) 결혼을 위한 직장의 지원

직장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어떤 지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제도’(60명)와 ‘산전 산후 유급휴가지원’(52명)이 비교적 많고, ‘출산 육아휴가 이후 복귀지원’(30명), ‘남편의 출산육아관련 휴가’(10명), ‘근로형태의 유연화’(10명), ‘가족친화적 직장문화’(2명)의 순이었다. 그러나 ‘지원 없음’이 87명으로 가장 많아 아무런 지원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결혼을 못하는 미혼여성의 결혼을 돕기 위해 직장/사회/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다중응답으로 184명이 응답하였는데 ‘사내결혼 장려/사내결혼 불이익 없앴’이 76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사내부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47명), ‘미혼 남녀의 만남의 기회 마련’(40명), ‘사내 결혼 컨설턴트 제도마련’(19명)이며 결혼을 위한 ‘외국남성 이민정책’도 2명이 있었다. 그리고 기타에 응답한 40명 중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한 27명의 의견을 들어보면 13명이 직장 내 탁아 및 보육시설확대, 6명이 ‘결혼 후 직장내 차별 없애기’, ‘사내결혼 뿐만 아니라 기타 결혼 불이익 없앴’ 등을 원했으며, 7명이 경제적 지원, 2명이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 2명이 ‘결혼 후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지원해 줄 것을 원하였다. 기타의 의견까지 합하면 사내결혼 불이익 없애기가 83명으로 여성이 결혼을 함으로서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출산을 위한 국가지원

출산을 돕기 위해 직장/사회/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189명(미혼 117명, 기혼 72명)의 대상자가 응답하였다. 대상자가 자필로 응답한 내용을 유목화하여보면 가장 많은 것이 **경제적 지원으로 84명**이 응답하였다. 여기에는 출산장려금을 포함하여 탁아 및 보육비지원, 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원, 세금면세 등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명의 자녀라도 지원해 줄 것과, 일용직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에게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보육 및 탁아시설 지원으로 73명**이 응답하였다. 특히 직장 내 탁아시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양육환경을 가진 보육시설, 밤에 일하는 여성을 위한 24시간 탁아소 운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셋째는 **유급 출산 및 육아휴가 지원**을 52명이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남편의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넷째 **출산후 직장복귀지원**으로 15명이 요구하였는데 여기에는 휴직후 직장 복귀시 불이익이나 눈치안주기, 출산 육아휴가 후 복직보장, 복직후 교육 등 출산후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섯째 **육아에 대한 남편과의 공동부담**, 가족이 돕는 사회적 분위기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4명이었다. 그 외 의료비 지원, 출산여성 취업지원, 양육도우미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8. 여성의 결혼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책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여성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결혼상대자 및 결혼하고 싶은 마음 없음

미혼여성이 결혼이 늦는 주된 이유는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 상대자가 없어서’ 이다. 이중 ‘학업이 끝나지 않아서’는 대학졸업을 하지 않은 24세 이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2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결혼상대자가 없어서’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가 주된 이유이다. 그러므로 출산률 증가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이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결혼하고 싶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미혼여성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내결혼장려/사내결혼 불이익 없앰, 사내부부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미혼남녀의 만남의 기회 마련, 사내 결혼 컨설팅트 제도 마련이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해결방법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2) 연령으로 인한 불임 및 불임 가능성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결혼연령과 그에 따른 불임 및 불임 가능성이다 연령은 불임의 주요 요인이다(Orshan, 2008). 미혼여성의 86.4%가 결혼후 아기를 갖기 원하고, 35세 이상의 미혼여성은 전원이 아기를 원하고 있다. 여성의 임신율은 20대가 가장 높고 그 후 점차 감소한다(Orshan, 2008). 이것은 기혼여성중 28.6%가 나이가 많아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유 없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여성을 합하면 50%가 연령으로 인한 불임이나 불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것은 기혼여성이 둘째 아기를 원하나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의 연령과 임신률에 대한 교육,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생식생리와 임신을 방해 하는 요인에 대한 교육, 여성의 일생을 통해 학업-일-결혼-임신/출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작성 및 실천을 제안한다.

3) 직업과 자기발전 방해

미혼여성들이 출산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18명(13.6%)으로 소수였지만, 아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아기가 ‘직업과 자기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가장 많다. 특히 24세 이하에서 많고(5명), 30-32세에 2명, 35세 이후는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24세 이하의 미혼여성은 나이가 적으므로 결혼보다는 직업생활과 자기발전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과 자기발전이 출산을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직업과 자기발전에 방해’ 요인은 30세 이전의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나이가 들면서 변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 출산을 원할 때는 결혼과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혼여성들은 출산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정 연령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산연령을 고려하여 학업, 직업, 결혼과 임신 등 인생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임신율이 높을 때 결혼과 출산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4)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

기혼여성들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 양립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에게 출산을 돕기 위해 직장/사회/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육아에 대한 남편의 공동부담’을 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기혼여성에게 있어 가사와 육아는 완전히 여성의 부담이다. 비록 남편이나 가족이 도와준다고 하여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일 뿐 모든 책임은 여성(어머니)에게 있다(이경혜, 2005). 그러므로 기혼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 남편과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가족, 사회 국가가 함께 책임을 나누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편의 출산 및 육아 휴가제도와 남편의 가사일 분담을 제안한다.

5) 아기 맡길 곳이 없음

여성이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은 아기를 안심하고 맡길 탁아소나 돌보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특히 기혼여성이 둘째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중요한 이유가 아기를 돌볼 사람이나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상여성들은 직장/사회/국가에 대해 ‘보육 및 탁아시설 지원, 출산 및 육아휴가기간의 연장, 휴가기간의 탄력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직장내 탁아시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국가에서 시설과 양육 및 교육의 질을 인정하는 탁아 및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다. 또한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탁아시간의 연장 혹은 24시간 탁아시설 운영을 요구하였다. 그러므로 직장, 사회, 국가는 탁아시설의 유무와 수를 늘리는 가시적인 행정보다는 실제로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탁아소 및 보육시설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6) 경제적 부담

기혼여성이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로 자녀양육과 사교육비의 부담, 경제적 능력, 자녀양육능력을 들고 있다. 미혼여성도 아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와 ‘부모노릇 할 자신이 없어서’를 들고 있다. 이것은 여성의 출산에 자녀양육과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이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출산을 돕기 위한 직장/사회/국가의 지원’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84명)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출산장려금의 확대지원(한명의 출산이라도), 탁아 및 보육비 지원, 중고등학교까지의 교육비와 사교육비 지원, 일용직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줄 것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본 연구대상자가 중산층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산층에 대한 국가 사회의 지원을 강력히 제안한다. 또한 현재 3명 이상의 출산아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한명의 출산아에게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7) 출산여성에 불리한 직장 문화

최근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고 하나 아직도 가부장사회의 직장 문화를 갖고 있다(이자형, 2005). 직장의 내규나 근로조건에는 남녀차별이나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하나 실제로는 많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아직도 결혼, 출산은 곧 퇴직이라는 불문율이 있어 대상여성들은 출산 후 직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 사회,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눈치안주기, 육아휴직 후 복직 보장, 직장 복귀 후 재교육, 출산여성의 취업지원 등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출산여성이 경험하는 불리한 직장문화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직장 사회 국가는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를 없애고, 출산여성의 직장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 할 것과 출산여성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인센티브의 일부를 담당하고 직장에 대한 강제성이 있을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V. 논의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성의 입장에서 출산의 주체자인 여성들에게 “왜 여성들은 아기를 낳지 않는가? 혹은 못 낳는가?”에 대한 질문과 국가의 정책이 여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았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출산을 저하를 노동 생산성이라는 경제적 측면과 노령인구 부양이라는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므로 저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도(2008, 보도참고자료) ‘여성의 결혼관 및 자녀관의 변화’를 저출산의 원

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원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미혼여성의 86.6%가 결혼후 아기를 갖기 원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가치관도 3.43점(5점 만점)으로 긍정적이었다. 이것은 여성신문사에서 조사한 “2030 여성 54% 아이낳고 싶다(www.career.co.kr)” 보다 높으며, 복지부의 “미혼여성의 결혼에 대한 소극적 태도 48.6%(2008 보도참고자료)보다 높다. 특히 자녀에 대한 가치관에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가 가장 높고 ‘자녀는 나의 자유에 제약이 된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가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자녀를 갖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수단이 아니라 아이자체가 중요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기쁘고 가치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이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한편 적은 수이기는 하나(18명) 출산을 원하지 않는 여성들은 ‘직업과 자기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24세 이하의 여성에게서 주로 나타나고(61.1%) 35세 이상의 여성에서는 한명도 없다는 것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나이가 어릴 때는 직업과 자기발전을 중요시 하나 나이가 들면 아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KAIST 대학 2학년 학생은 학업-일-직장생활과의 관계에서 “차라리 출산을 포기하겠다.” 라고 한다(조선일보 090611). 그러나 35세가 넘은 여성은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배부른 여자가 가장 부럽다”라고 한다(김춘숙, 2008). 이러한 반응을 볼 때 직업과 자기발전은 젊은 연령의 여성에게만 해당하는 어느 정도 가변적이고 제한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임신이 잘 될 수 있는 20대 연령에서는 직업과 자기발전으로 결혼과 임신을 원하지 않다가 나이가 들어서야 결혼과 임신을 원하나 이때는 결혼상대가 없고 결혼을 해도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령과 임신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연령이 임신/출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막연히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뿐 임신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는 응답은 없었다.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난자의 질(quality)이 떨어지며 35세부터는 수정률이 급격히 저하된다. 또한 유산, 조산, 임신중독증 등의 임신합병증과 난산으로 인한 제왕절개술, 출혈, 감염 등 출산합병증을 증가시킨다.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쳐 저출생체중아, 다운증후군, 각종 발달 장애아를 분만할 가능성이 높다(이경혜 이영숙, 2004). 뿐만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술, 담배, 약물 등 임신과 출산을 을 저해하는 위험요소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불임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연령은 불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Orshan, 2008).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도출된 7가지 요인과 그에 따른 대책은 정부의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시한 것과 거의 같다. 이것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프랑스의 모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실

재 조사대상 여성들은 이러한 정책을 모르고 있으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출산장려금제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는 여성은 많았으나(79.7%) ‘받아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49.32%, 도움이 안 된다 는 사람이 30.32%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홍보용으로 그칠 뿐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출현의 저출산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책 만 있을 뿐 시행은 미미하다. 시행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머물러 있을 뿐 중산층까지는 혜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을 통한 지원도 공무원이나 일정한 규모의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될 뿐 일일 근로자, 비정규직, 판매직, 개인사업가 등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맞벌이일 경우도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직장의 지원에 대해서도 민간 기업일 경우 지원을 권장할 뿐 강제성이나 인센티브가 없으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현안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다(유해미, 200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대책을 위한 정책 중 우선순위와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한 가지라도 전 출산여성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출산지원금과 일정액의 양육비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첫아이부터 지급 하는 것, 여성근로자가 있는 직장은 의무적으로 24시간 탁아소를 운영 하는 것 등이다. 예산 상 어려울 것 같지만 현재 65세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미래의 국민인 아이들을 위해 이정도의 지출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출산하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 그 이상이다. 기업도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

둘째, 중산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중산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로서 곧바로 저소득층으로 몰락하게 된다(조선일보 2009, 7. 25 워킹푸어 300만명시대). 열심히 일하고도 아무런 혜택이 없어 아이가 오히려 짐이 된다면 누가 아이를 낳겠는가? 다행한 것은 복지부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나 ‘애 안낳는 중산층’이란 기사(중앙일보 091116)에서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시행결과를 기대해 본다.

셋째, 출산여성에 불리한 직장분위기를 없애고 가족 친화적 직장문화를 의무화 할 것을 제안 한다.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영업 이익을 올리는 그 이상이다. 당장 기혼여성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여 기혼 혹은 출산여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적자원을 고갈 시키는 것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위해 당장의 어려움을 참고 기혼 출산여성을 격려해 주는 직장 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 결혼과 직장 내 탁아시설을 한 후 생산성과 영업실적이 더 올랐다는 보도가 있다. 기혼 출산여성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090619, ‘직장맘, 업무시간 줄이고

사내커플 같은 지역근무’).

넷째, 건강한 자녀 출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이 건강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가져 임신과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임신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피하도록 예방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장여성이 직장일로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없을 때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마련하여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 **여성의 입장에서**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원하지만 결혼상대자를 만날 수 없고, 자녀를 갖고 싶으나 경제적 부담과 아기 맡길 곳이 없어 출산을 망설이게 되며, 늦은 결혼 연령은 불임과 불임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위해 국가와 사회에 대해 다양한 요구를 하였으며 국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미 많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실행이 되지 않아 홍보에 그치고 있어 전시행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며, 실효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책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시행에 따른 평가연구는 거의 없었다. 그러므로 저출산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대책 중 하나라도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장 우선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을 모든 출산여성에게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성 스스로도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학업-일-결혼-임신/출산에 관한 인생 전반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원하는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하도록 하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제언

1. 여성이 건강한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여성의 건강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춘숙(2008).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과.
- 유해미(2009).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현안보고서, vol 39, 국회입법조사처.
- 이경혜, 여옥남(2003). 출산장려정책과 조산사의 역할. 부모자녀건강학회지, 6(1), pp.59-69.
- 이경혜, 이영숙(2004). 여성건강간호학 I. II. 서울: 도서출판 현문사.
- 이자형, 이경혜, 엄재정, 노부꼬 히라다, 유꼬 히라노(2005). 한국과 일본 기혼간호사의 성역할 스트레스. 질적연구, 6(2), pp.1-14.
- Karen Benzies, Suzanne Tough, Keren Toffemire, Corine Frick, Alexandra Faber, and Christine Newburn-Cook(2006). Factors Influencing Women's Decisions about Timing of Motherhood, JOGNN, 35(5), pp.625-633.
- Orshan, Susan A. Maternity(2008). *Newborn and Women's Health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08년 출생아수 466천명, 합계출산율 1.19명, 2009. 2. 2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 e-나라지표, 출생 사망 추이, www.index.go.kr
- 조선일보, 칼퇴근하는 날 주 1회 지정 ... 불임직원에 시술비 까지, 2008. 12. 29.
- 조선일보, 우리가 재벌이에요? 또 낳게, 2009. 5. 5.
- 조선일보, 차라리 출산을 포기하겠다. 2009. 6. 11.
- 중앙일보, ‘직장맘’ 업무시간 줄이고 사내커플 같은 지역근무, 2009. 6. 19.
- 조선일보, 워킹 푸어 300만명 시대, 2009. 7. 25.
- 중앙일보, 자녀수, 중산층<빈곤층<서민층<고소득층, 2009. 11. 16.
- 중앙일보, ‘저출산 그늘’ 불법낙태 단속한다, 2009. 11. 16.

발표 2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

최은영

(통계개발원 사무관)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최은영·박영실(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

1. 서론

실제의 출생아수에 기초한 현실적인 출산 수준을 의미하는 출산력(fertility)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subpopulation group)별로 다르며, 지역별로도 다르다. 인구학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기준에 따른 출산력의 차이를 ‘차별 출산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출산력 감소의 현황과 인과구조를 알고 이에 기반해서 정책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고 적실한 자료에 기반하여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진 집단과 지역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출산력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서 현상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출산력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율이 어떻게, 어떠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율이 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별 출산력을 통해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정책은 바람직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행위로, 정책 대상이 되는 특정 인구 집단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하위 인구 집단의 출산력 변화를 다각도에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연령별로 사회경제적 특성이 큰 차이가 나므로, 이를 고려한 하위 인구 집단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혼인·출산을 선택했는지 혹은 선택하지 않았는지에 의해 구분되는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통해 유배우율의 변화 원인을 살펴보았다. 대부분 기혼유자녀 여성을 분석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혼 여성과 함께 결혼과 출산에 있어 다른 선택을 한 집단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집단 간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미혼 여성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결혼관계대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미혼·비혼 집단의 증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미혼 여성·기혼무자녀 여성·기혼유자녀 여성·기혼무자녀 남성·기혼유자녀 남성으로 구분하여 그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를 기초자치단체별로 살펴보았다. 유사한 사회적 계급과 직업을 가진 개인들이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인 출산율을 보이기 때문에 출산율의 변화와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Boyle, 2003).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별 차별 출산력은 지역유형별 혹은 시도별이었으며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인 기초자치단체별 출산력 연구가 부재하였다. 지역별 차별 출산력에 대한 분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어떠한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 어떠한 속도로 출산력이 감소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출산력 감소의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지역을 파악함으로써 저출산 정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지역을 설정 가능하게 해주는 등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과 2000~2007년 인구동향조사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인구동향조사의 경우, 당해 연도에 출생이 이루어진 가구에 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출산력의 변화 추세와 패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의 특성상 지난 시기 동안의 출생에 관한 누층적인 자료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장기 시계열 분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구동향조사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와 모의 정보 등 부가적인 변수가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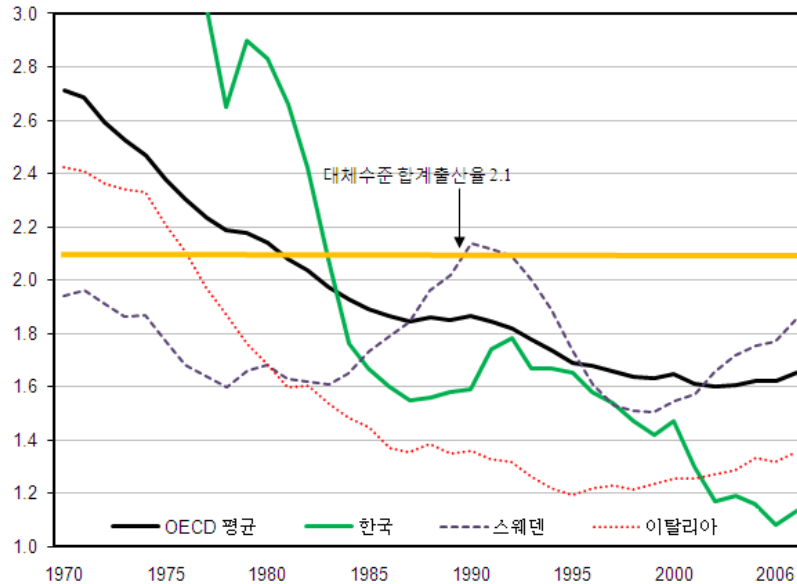
II. 출산력과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1.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출산력 변화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1990년대 이후 북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회복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국가의 출산율은 현재 거의 2명에 가깝다. 현재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가부장적이고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문화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왔던 국가들이다(Chesnais, 1996; MacDonald, 200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성분업적 역할 규범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결혼을 하는 경우에도 자녀 출산을 최대한 미루며, 또한 자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반응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 한국·일본·이탈리아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들로 최근에도 지속적으

로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국가별 합계출산율의 변화(1970~2006년)



2. 출산율의 변화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는 출산율 저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데, 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15~49세 가임기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1980년에 2.94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2.13명, 2005년에는 1.74명으로 하락하였다. 연령대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더라도 모든 집단에서 일관되게 평균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1>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의 변화(1980~2005년)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2000년	2005년
전체	3.59	3.26	2.97	2.54	2.43
15~49세	2.94	2.52	2.13	1.81	1.74

출처: 권태환(2008).

주: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출생아수를 조사하지 않았음.

모의 연령대별로 출생아수와 그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한자녀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다자녀 비율은 증가하였다(표 2 참조). 한자녀 비율이 20~29세까지는 60% 이상이었으나, 30~34세는 34.3%, 35~39세는 17.4%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55~59세에는 9.5%였다. 다자녀 비율은 35~39세 13.7%, 45~49세 19.3%, 55~59세 53.8%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현격하게 증가하였다. 20~30대는 아직 출산이 진행 중인 연령대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한자녀 비율이 감소하고, 두자녀와 다자녀 비율이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와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4세 여성과 45~49세 여성의 한자녀·두자녀·다자녀 비율을 비교해 보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한자녀 비율은 15.5%로 일정한 반면 40~44세 여성에서 다자녀 비율이 감소한 만큼 두자녀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50대 여성에서는 이러한 두자녀 비율과 다자녀 비율의 상쇄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표 2〉 모의 연령대별 출생아수와 비율

구분	한자녀		두자녀		다자녀	
20~24세	3,164	77.4	870	21.3	55	1.3
25~29세	24,698	61.7	14,113	35.2	1,232	3.1
30~34세	43,989	34.3	74,654	58.2	9,717	7.6
35~39세	28,425	17.4	112,898	69.0	22,355	13.7
40~44세	27,425	15.5	122,310	69.2	26,944	15.3
45~49세	26,711	15.5	112,548	65.2	33,394	19.3
50~54세	12,748	10.9	62,581	53.3	41,979	35.8
55~59세	5,050	9.5	19,580	36.7	28,675	53.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III.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배우자의 차별 출산력 변화

1.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 출산력

연령 변수의 고려없이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보면,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아수가 적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자료를 연령대별로 분해해 보면 25~29세에서 45~49세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산이 완결되었다고 보여지는 40~44세 집단의 경우 그 차이

가 크지 않다(표 3 참고). 이 연령대 여성의 경우, 초졸의 평균 출생아수는 2.10명, 대학원졸은 1.83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차이가 큰 쪽으로 줄어들었으며, 남성의 경우 초졸이하의 평균 출생아수는 1.95명, 대학원졸은 1.93명으로 차이가 미미한 편이다.

〈표 3〉 성-연령대-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	초졸이하	1.28	1.73	2.00	2.10	2.31	2.67	2.99
	중졸	1.33	1.72	1.98	2.00	2.08	2.32	2.56
	고졸	1.03	1.63	1.92	1.95	1.95	2.11	2.31
	대졸	0.63	1.34	1.80	1.91	1.88	2.00	2.17
	대학원졸이상	0.48	1.07	1.65	1.83	1.85	1.97	2.09
남	초졸이하	1.04	1.42	1.74	1.95	2.09	2.38	2.82
	중졸	1.09	1.47	1.81	1.95	2.05	2.22	2.57
	고졸	0.76	1.34	1.80	1.97	1.98	2.08	2.36
	대졸	0.48	1.06	1.69	1.93	1.96	2.00	2.20
	대학원졸이상	0.41	0.98	1.66	1.93	1.99	2.06	2.24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통해 최근 시기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해 보면, 장기 동향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4 참고). 2000~2007년 사이에 초졸과 대졸이상의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가 여성은 0.59명에서 0.19명으로, 남성은 0.42명에서 0.23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 출생아수의 감소폭이 대졸이상보다 초졸에서 컸기 때문이다. 2000~2007년 사이 고졸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소 증가하고 대졸이상의 감소 정도가 미미한 반면 초졸이나 중졸과 같은 저학력자의 평균 출생아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표 4〉 성·교육수준별 평균 출생아수(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여	무학	1.97	2.00	2.00	1.73
	초졸	2.12	2.00	1.92	1.70
	중졸	1.97	1.89	1.79	1.65
	고졸	1.69	1.70	1.71	1.70
	대졸이상	1.53	1.51	1.50	1.51
남	무학	2.01	2.00	1.94	1.92
	초졸	2.01	1.98	1.96	1.76
	중졸	1.85	1.80	1.79	1.74
	고졸	1.67	1.67	1.68	1.67
	대졸이상	1.59	1.56	1.54	1.5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년도.
 주: 교육수준이 미상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차별 출산력

전체 코호트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평균 출생아수를 살펴본 결과, 여성과 남성 모두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실업자에 비해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5 참조). 하지만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출생아수는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은 취업자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남성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취업자보다 평균 출생아수가 많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현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여성의 경우 주 출산 연령층인 40세 미만 집단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출생아수가 취업자나 실업자에 비해 많았으나, 4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취업자의 평균 출생아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연령층에서 미취업 여성의 출생아수가 취업 여성의 출생아수보다 많다는 기존 연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5)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표 5〉 성·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여		남	
	인구수	평균 출생아수	인구수	평균 출생아수
취업자	411,368	1.93	712,851	1.88
실업자	11,905	1.61	16,015	1.83
비경제활동인구	495,944	1.88	57,931	1.9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표 6〉 성-연령대-경제활동상태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	취업	0.62	1.42	1.88	1.98	2.07	2.42	2.86
	실업	0.30	0.91	1.57	1.69	1.81	2.04	2.30
	비경활	1.10	1.62	1.91	1.95	1.98	2.23	2.53
남	취업	0.68	1.23	1.76	1.96	2.00	2.15	2.51
	실업	0.67	1.17	1.61	1.85	1.89	2.02	2.30
	비경활	0.55	1.09	1.61	1.83	1.87	2.05	2.39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3. 직업에 따른 차별 출산력

직업별 차별 출산력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평균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농림어업직군이었으며, 가장 적은 직업군은 여성 관리·전문직군, 남성 사무직군이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을 통제한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단, 완결 출산력을 보여주는 40~44세, 45~49세 집단의 경우 농림어업직군을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 사이의 차이는 미미한 편이었다(표 7 참조).

〈표 7〉 성-연령대-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5년)

(단위: 명)

구분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여	관리·전문직	0.49	1.22	1.77	1.89	1.89	2.03	2.26
	사무직	0.55	1.33	1.82	1.93	1.96	2.13	2.33
	서비스·판매직	0.84	1.57	1.89	1.96	2.01	2.25	2.57
	농림어업직	1.58	2.08	2.30	2.33	2.53	2.99	3.44
	기능·노무직	0.87	1.67	1.93	1.97	2.03	2.32	2.66
	학생·가사·무직	1.09	1.61	1.90	1.94	1.98	2.23	2.52
남	관리·전문직	0.52	1.10	1.71	1.95	1.98	2.05	2.28
	사무직	0.58	1.15	1.71	1.94	1.98	2.06	2.31
	서비스·판매직	0.69	1.26	1.77	1.96	1.98	2.09	2.36
	농림어업직	1.09	1.64	1.98	2.18	2.29	2.58	3.07
	기능·노무직	0.82	1.38	1.81	1.95	1.97	2.09	2.38
	학생·가사·무직	0.58	1.11	1.61	1.83	1.88	2.04	2.3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입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차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농림어업직군에서 높은 출산율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인구동향조사 자료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보여준다. 비록 평균 출생아수가 많기는 하나, 2000~2007년 사이에 이 직업군의 평균 출생아수 감소폭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성·직업별 평균 출생아수(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여				남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관리·전문직	1.50	1.44	1.42	1.42	1.63	1.58	1.57	1.55
사무직	1.42	1.40	1.39	1.39	1.60	1.57	1.55	1.54
서비스·판매직	1.69	1.56	1.54	1.51	1.69	1.66	1.66	1.64
농림어업직	2.22	2.19	2.08	1.95	1.98	1.93	1.94	1.84
기능·노무직	1.48	1.46	1.43	1.38	1.69	1.68	1.67	1.65
학생·가사·무직	1.66	1.65	1.64	1.63	1.53	1.52	1.55	1.5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년도.

주: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임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기능·노무직에는 기능원·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포함됨.

IV.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혼인·출산의 선택과 유배우율의 감소

1. 교육수준의 차별성

미혼 여성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미혼 여성, 기혼무자녀 여성, 기혼유자녀 여성 순으로 대졸 비율이 높았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무자녀 여성의 대졸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미혼 여성과 나머지 집단 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해진다. 미혼 여성의 대졸·대학원졸의 고학력 인구 비율은 기혼무자녀 남성이나 기혼유자녀 남성과 유사하거나 더 높다(표 9 참조).

〈표 9〉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교육수준(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29세	초졸	62	0.3	30	0.4	183	0.5	5	0.2	51	0.4	
	중졸	186	0.9	82	1.2	664	1.7	28	1.0	251	1.9	
	고졸	10,968	55.9	4,394	65.5	30,391	75.9	1,884	67.4	9,800	73.3	
	대졸	7,823	39.9	2,039	30.4	8,324	20.8	821	29.4	3,052	22.8	
	대학원	578	2.9	163	2.4	481	1.2	59	2.1	211	1.6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34세	초졸	75	0.6	81	0.8	593	0.5	25	0.3	195	0.3	
	중졸	199	1.7	203	2.1	2,368	1.8	102	1.1	936	1.2	
	고졸	6,990	60.5	5,658	58.9	91,168	71.0	4,605	50.6	46,790	61.0	
	대졸	3,771	32.7	3,243	33.7	31,810	24.8	3,782	41.6	25,534	33.3	
	대학원	510	4.4	429	4.5	2,421	1.9	578	6.4	3,309	4.3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39세	초졸	86	1.3	170	2.9	2,262	1.4	71	1.2	649	0.5	
	중졸	263	4.0	416	7.1	8,205	5.0	210	3.4	2,776	2.2	
	고졸	3,932	60.5	3,747	64.2	113,310	69.2	3,342	54.3	72,733	56.4	
	대졸	1,932	29.7	1,327	22.7	37,188	22.7	2,194	35.7	47,167	36.6	
	대학원	289	4.4	173	3.0	2,713	1.7	333	5.4	5,543	4.3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44세	초졸	163	4.2	445	8.9	9,640	5.5	266	6.2	3,257	2.2	
	중졸	348	9.1	886	17.7	24,945	14.1	503	11.7	9,128	6.1	
	고졸	2,041	53.1	2,930	58.4	110,004	62.3	2,420	56.1	83,040	55.1	
	대졸	1,089	28.4	671	13.4	29,799	16.9	973	22.6	49,139	32.6	
	대학원	200	5.2	84	1.7	2,291	1.3	148	3.4	6,211	4.1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49세	초졸	245	8.8	809	17.4	25,290	14.6	497	13.6	9,414	6.3	
	중졸	376	13.4	1,126	24.2	41,981	24.3	656	17.9	19,783	13.2	
	고졸	1,430	51.1	2,184	47.0	86,894	50.3	1,870	51.1	80,125	53.3	
	대졸	580	20.7	462	9.9	16,934	9.8	555	15.2	35,341	23.5	
	대학원	167	6.0	68	1.5	1,554	0.9	85	2.3	5,593	3.7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주: 무자녀기구는 혼인 기간 2년 이상의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2. 경제활동상태의 차별성

연령대별로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미혼 여성의 취업률은 남성에 비해 낮은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다른 여성 집단과 큰 차이를 보인다(표 10 참조). 미혼 여성과 기혼유자녀 여성의 취업률은 각각 25~29세 78.3%·25.7%, 30~34세 76.7%·33.8%, 35~39세 71.4%·44.3%로,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에서 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0〉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경제활동상태(2005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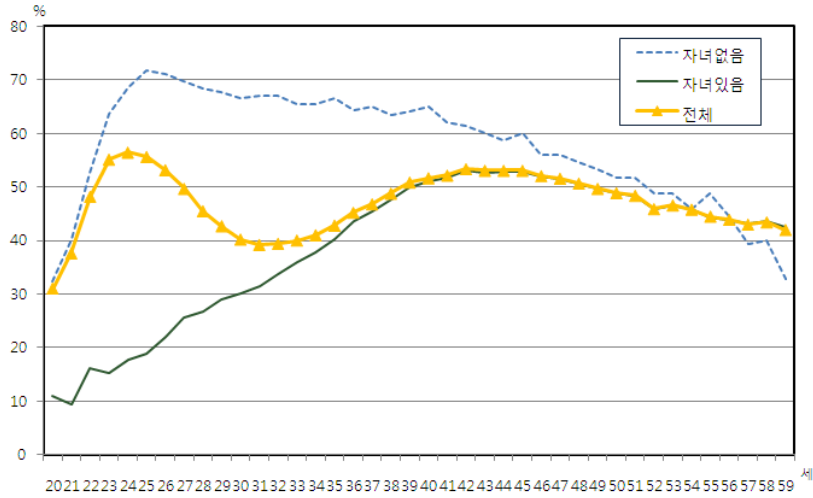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 29세	취업	15,358	78.3	3,549	52.9	10,294	25.7	2,559	91.5	12,594	94.2
	실업	826	4.2	192	2.9	142	0.4	63	2.3	238	1.8
	비경활	3,433	17.5	2,967	44.2	29,607	73.9	175	6.3	533	4.0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 34세	취업	8,859	76.7	5,032	52.3	43,369	33.8	8,427	92.7	73,432	95.7
	실업	577	5.0	334	3.5	656	0.5	188	2.1	1,154	1.5
	비경활	2,109	18.3	4,248	44.2	84,335	65.7	477	5.2	2,178	2.8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 39세	취업	4,644	71.4	2,932	50.3	72,523	44.3	5,586	90.8	123,097	95.5
	실업	404	6.2	261	4.5	1,733	1.1	158	2.6	1,882	1.5
	비경활	1,454	22.4	2,640	45.3	89,422	54.6	406	6.6	3,889	3.0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 44세	취업	2,623	68.3	2,456	49.0	90,046	51.0	3,747	86.9	141,833	94.1
	실업	222	5.8	192	3.8	2,291	1.3	136	3.2	2,681	1.8
	비경활	996	25.9	2,368	47.2	84,342	47.7	427	9.9	6,261	4.2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 49세	취업	1,726	61.7	2,159	46.4	86,059	49.8	3,028	82.7	137,361	91.4
	실업	154	5.5	151	3.2	2,571	1.5	131	3.6	3,185	2.1
	비경활	918	32.8	2,339	50.3	84,023	48.7	504	13.8	9,710	6.5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주: 무자녀가구는 혼인 기간 2년 이상의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이수가 0인 경우임.

출산·양육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유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각 세별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전체적으로는 M자형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는 가운데, 자녀가 없는 경우와 자녀가 있는 경우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25세부터 50세 이전까지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되는데 반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는 20대 이후 40대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주 출산 연령대인 25~34세에서 그 차이가 크다. 주 출산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격하게 낮아짐에 따라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이 M자형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이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최형재, 2008).

[그림 2] 자녀의 유무에 따른 여성의 각 세별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사례 코호트, 2005.

3. 직업의 차별성

연령대별로 혼인·출산의 선택과 직업을 살펴보면, 직업 미혼 여성, 기혼무자녀 여성, 기혼유자녀 여성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직업군은 차별적이었다(표 11 참조). 미혼 여성은 기혼 여성에 비해 학생·가사·무직군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며, 미혼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 걸쳐서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혼유자녀 여성과 그 차이가 큰데, 30~34세 여성의 경우 관리·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미혼 여성의 경우 각각 27.4%, 21.7%인데 비해 기혼유자녀 여성은 9.7%, 9.4%로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1〉 연령대별 혼인·출산의 선택과 직업(2005년)

(단위: 명, %)

구분	여성						남성				
	미혼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기혼무자녀	기혼유자녀		
25~29세	관리·전문직	6,365	32.4	1,254	18.7	3,202	8.0	625	22.3	2,429	18.2
	사무직	4,572	23.3	1,296	19.3	3,445	8.6	526	18.8	2,237	16.7
	서비스·판매직	3,452	17.6	665	9.9	2,284	5.7	436	15.6	1,872	14.0
	농림어업직	9	0.0	23	0.3	304	0.8	12	0.4	183	1.4
	가능·노무직	907	4.6	297	4.4	1,007	2.5	874	31.2	5,247	39.3
	학생·가사·무직	4,304	21.9	3,169	47.2	29,775	74.4	247	8.8	789	5.9
	미상	8	0.0	4	0.1	26	0.1	77	2.8	608	4.5
	계	19,617	100.0	6,708	100.0	40,043	100.0	2,797	100.0	13,365	100.0
30~34세	관리·전문직	3,162	27.4	1,865	19.4	12,500	9.7	2,826	31.1	20,060	26.1
	사무직	2,503	21.7	1,513	15.7	12,021	9.4	2,067	22.7	16,194	21.1
	서비스·판매직	2,524	21.9	1,141	11.9	11,864	9.2	1,249	13.7	10,921	14.2
	농림어업직	9	0.1	72	0.7	1,401	1.1	69	0.8	1,009	1.3
	가능·노무직	627	5.4	419	4.4	5,473	4.3	2,072	22.8	23,590	30.7
	학생·가사·무직	2,716	23.5	4,601	47.9	85,074	66.3	704	7.7	3,434	4.5
	미상	4	0.0	3	0.0	27	0.0	105	1.2	1,556	2.0
	계	11,545	100.0	9,614	100.0	128,360	100.0	9,092	100.0	76,764	100.0
35~39세	관리·전문직	1,574	24.2	751	12.9	16,503	10.1	1,630	26.5	34,741	27.0
	사무직	1,048	16.1	570	9.8	13,669	8.4	1,101	17.9	26,075	20.2
	서비스·판매직	1,527	23.5	980	16.8	24,832	15.2	852	13.9	18,869	14.6
	농림어업직	9	0.1	131	2.2	3,645	2.2	168	2.7	2,807	2.2
	가능·노무직	465	7.2	491	8.4	13,684	8.4	1,796	29.2	39,281	30.5
	학생·가사·무직	1,876	28.9	2,910	49.9	91,327	55.8	579	9.4	5,976	4.6
	미상	3	0.0	0	0.0	18	0.0	24	0.4	1,119	0.9
	계	6,502	100.0	5,833	100.0	163,678	100.0	6,150	100.0	128,868	100.0
40~44세	관리·전문직	874	22.8	406	8.1	14,676	8.3	790	18.3	38,446	25.5
	사무직	449	11.7	307	6.1	11,186	6.3	487	11.3	24,846	16.5
	서비스·판매직	966	25.1	992	19.8	35,390	20.0	564	13.1	21,160	14.0
	농림어업직	26	0.7	206	4.1	7,819	4.4	253	5.9	6,433	4.3
	가능·노무직	296	7.7	534	10.6	20,761	11.8	1,627	37.7	49,582	32.9
	학생, 가사, 무직	1,229	32.0	2,570	51.2	86,833	49.1	580	13.5	9,240	6.1
	미상	1	0.0	1	0.0	14	0.0	9	0.2	1,068	0.7
	계	3,841	100.0	5,016	100.0	176,679	100.0	4,310	100.0	150,775	100.0
45~49세	관리·전문직	571	20.4	263	5.7	8,961	5.2	576	15.7	34,038	22.7
	사무직	250	8.9	176	3.8	7,515	4.4	284	7.8	18,961	12.6
	서비스·판매직	630	22.5	929	20.0	35,241	20.4	466	12.7	20,686	13.8
	농림어업직	32	1.1	231	5.0	12,873	7.5	312	8.5	11,495	7.7
	가능·노무직	230	8.2	550	11.8	21,266	12.3	1,367	37.3	51,125	34.0
	학생·가사·무직	1,082	38.7	2,499	53.8	86,785	50.3	645	17.6	13,221	8.8
	미상	3	0.1	1	0.0	12	0.0	13	0.4	730	0.5
	계	2,798	100.0	4,649	100.0	172,653	100.0	3,663	100.0	150,256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주 1: 무자녀거구는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인 기혼자(혼인·이혼·사별) 중에서 출생아수가 0인 경우임

주 2: 관리·전문직에는 의회인원·고위관리자·전문직이, 가능·노무직에는 가능·장치기계조작원·단순노무직이, 미상에는 군인이 포함됨.

분석 결과 경제활동상태나 직업에 있어서 남녀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여성 간에도 결혼과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여성 집단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전문직 비율 등에서 다른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혼과 자녀의 출산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뚜렷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그들이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 순간 어렵게 성취해온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¹⁾ 여성이 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은 자발적인 미혼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거나 자녀를 낳더라도 한 명만 낳는 것일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미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1980년 25~29세의 기혼 여성 비율은 85.9%이었으나, 2000년에는 60.3%로, 2005년에는 절반 정도인 40.9%가 되었다(표 12 참조). 다시 말하면, 2000년 25~29세 여성 중 40%가 미혼이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2005년에는 60%가 미혼이었다. 2000~2005년 동안 30~34세의 미혼율은 10.5%에서 19.0%로, 35~39세의 미혼율은 4.1%에서 7.6%로 5년만에 해당 연령대의 미혼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보편혼(universal marriage) 규범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혼인율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 김보경·김한권(2005)의 대구지역 4개 대학의 재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이 사회참여 기회를 박탈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59.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 특히 대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높는데, 35~39세의 미혼율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서울의 대부분 지역은 10% 이상의 미혼율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21.0%)와 대구 중구(20.8%)에서는 미혼율이 20% 이상이었다.

〈표 12〉 기혼 여성 비율의 변화(1980~2005년)

(단위: %)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15~49세	63.5	63.7	63.6	65.3	66.0	63.1
15~19세	1.8	0.9	0.5	0.8	0.8	0.4
20~24세	33.9	27.9	19.5	16.7	11.3	6.3
25~29세	85.9	81.6	77.9	70.4	60.3	40.9
30~34세	97.3	95.7	94.7	93.3	89.5	81.0
35~39세	99.0	98.4	97.6	96.7	95.9	92.4
40~44세	99.5	99.3	98.9	98.1	97.6	96.4
45~49세	99.7	99.6	99.4	98.9	98.4	97.6
50~54세	99.8	99.7	99.6	99.4	99.0	98.3
55~59세	99.8	99.8	99.7	99.6	99.4	98.9
60~64세	99.9	99.8	99.8	99.7	99.6	99.2
65~69세	99.9	99.9	99.8	99.8	99.7	99.4
70~74세	99.9	99.9	99.8	99.8	99.8	99.5
75세이상	99.9	99.7	99.8	99.8	99.9	99.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전수, 해당년도.

V.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와 원인

1.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먼저 지역별 차별 출산력을 기혼 여성의 평균출생아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대도시 및 수도권에서 기혼여성의 평균출생아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광역시인 대도시의 평균 출생아수는 1.83명, 시도위의 중소도시는 1.89명, 군 지역은 2.35명이었고, 시도별로 보면 광주(2.03명)를 제외한 모든 특·광역시의 평균 출생아수가 2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서울(1.75명)·경기(1.77명)·인천(1.81명)의 평균 출생아수가 적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다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었는데 상위 지역은 대부분 전라남·북도에 위치하고 있고, 하위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하위 30개 지역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시군구이다.

〈표 13〉 시군구별 평균 출생아수 상·하위 30개 지역(2005년)

(단위: 명)

순위	상위		하위	
1	전남 신안군	2.91	서울 마포구	1.69
2	전북 진안군	2.79	서울 용산구	1.69
3	전남 장흥군	2.79	경기 군포시	1.71
4	전남 진도군	2.78	서울 영등포구	1.72
5	전북 순창군	2.76	서울 성동구	1.73
6	전북 장수군	2.75	서울 서대문구	1.74
7	전북 고창군	2.75	서울 관악구	1.74
8	전북 임실군	2.72	경기 오산시	1.74
9	전남 함평군	2.72	경기 고양시	1.74
10	전라 구례군	2.71	서울 서초구	1.74
11	전남 보성군	2.70	경기 시흥시	1.74
12	전남 담양군	2.70	서울 강남구	1.75
13	전남 강진군	2.68	서울 광진구	1.75
14	전남 고흥군	2.66	경기 성남시	1.75
15	전남 완도군	2.63	경기 안산시	1.76
16	전남 영광군	2.62	경기 용인시	1.76
17	전남 곡성군	2.60	서울 강서구	1.77
18	전남 무안군	2.59	서울 송파구	1.77
19	경남 산청군	2.56	경기 광명시	1.77
20	전남 장성군	2.56	서울 동작구	1.77
21	전남 나주시	2.55	인천 중구	1.77
22	전북 부안군	2.55	서울 성북구	1.77
23	경북 영양군	2.54	경기 안양시	1.77
24	전남 해남군	2.53	서울 노원구	1.78
25	경남 하동군	2.53	경기 의정부시	1.78
26	경북 봉화군	2.51	서울 금천구	1.78
27	경북 예천군	2.49	경기 과천시	1.78
28	전남 화순군	2.49	경기 수원시	1.78
29	경남 합천군	2.48	서울 구로구	1.78
30	전북 김제시	2.48	서울 은평구	1.7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사례 코호트, 2005.

2. 합계출산율의 변화

시군구별 합계출산율 분석에서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2000년 1.47명, 2003년 1.19명, 2005년 1.08명, 2007년 1.26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별 출산력의 차이가 크다. 특정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대체출산율 수준인 2.1명 이상인 경우도 있는 반면, 2003년 이후 모든 하위 10개 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계출산율 상·하위 지역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³⁾ 둘째, 전반적으로 군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높고, 도시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낮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으로, 서울 강남구·종로구, 부산 동구는 2000~2007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그룹에 포함되었다. 이는 저출산 지역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합계출산율 상·하위 30개 지역의 변화를 200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연도별 순위 변동 폭이 상위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하위 지역은 작다(표 14, 표 15 참조).⁴⁾ 이는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0년에 하위 30위권에 포함되었던 지역 중 2003년에는 26개, 2005년에는 26개, 2007년에는 23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위 지역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중구 등인데, 특히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의 경우 2005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000, 2003, 2005, 2007년에 출산이 이루어진 가구 중에서 자녀수가 한 명, 두 명, 세 명 이상인 다자녀 비율을 시군구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의 차이를 최소값·최대값·평균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6 참조). 2000년 이후 다자녀 비율은 대체로 일정한 가운데, 2000, 2003, 2005, 2007년 각각 한자녀 비율은 45.3%, 46.6%, 49.0%, 5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두자녀 비율은 41.6%, 40.4%, 38.0%, 36.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3) 2000년에는 강원 양구군(2.21명), 전남 영암군(2.18명), 인천 옹진군(2.12명)에서, 2007년에는 전남 보성군(2.33명)·강진군(2.26명)·영암군(2.11명)에서 대체출산율 이상의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4) 군지역의 순위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2000년에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에 포함되었던 경북 군위군과 같이 변동폭이 큰 경우는 예외적이다. 군위군의 합계출산율과 하위 순위는 2000년 1.21명(24위), 2003년 0.98명(24위), 2005년 1.47명(222위), 2007년 1.62명(201위)인데, 이는 한 해의 출생아수가 100~200명으로 적어, 합계출산율을 구성하는 분모나 분자의 절대수가 조금만 변화해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변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합계출산율 상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강원 양구군	2.21(1)	1.83(3)	1.58(4)	1.69(21)
전남 영암군	2.18(2)	1.90(1)	1.59(3)	2.11(3)
인천 용진군	2.12(3)	1.84(2)	- (82)	- (37)
강원 인제군	2.08(4)	1.61(10)	1.60(2)	2.07(4)
충남 계룡시	2.07(5)	- (44)	- (66)	- (41)
경남 거제시	2.06(6)	1.61(9)	1.51(9)	1.84(8)
전남 광양시	2.04(7)	- (37)	1.48(12)	1.76(12)
강원 화천군	1.99(8)	1.78(4)	1.71(1)	2.00(5)
강원 철원군	1.98(9)	1.51(21)	1.41(22)	- (33)
광주 광산구	1.97(10)	1.63(7)	1.44(15)	- (35)
경기 이천시	1.93(11)	1.47(28)	- (47)	- (51)
전남 화순군	1.93(12)	1.67(5)	1.39(26)	1.66(24)
울산 북구	1.92(12)	1.50(23)	1.53(6)	1.82(9)
전남 완도군	1.91(14)	- (32)	- (53)	- (45)
경기 사천시	1.89(15)	1.54(14)	1.38(30)	- (56)
충북 음성군	1.88(16)	- (32)	- (42)	- (47)
충남 서산시	1.87(17)	- (43)	- (42)	1.74(14)
전남 진도군	1.86(18)	1.58(11)	- (72)	1.79(11)
충남 당진군	1.85(19)	- (46)	- (56)	- (36)
전남 영광군	1.85(19)	1.50(24)	- (35)	1.75(13)
경북 구미시	1.84(21)	- (36)	- (55)	- (86)
제주 북제주군	1.84(22)	- (75)	- (50)	-
전남 무안군	1.83(23)	1.50(22)	1.38(29)	1.65(26)
전남 장흥군	1.83(24)	- (65)	1.38(28)	- (60)
전남 해남군	1.83(25)	- (45)	1.42(19)	1.63(30)
경기 연천군	1.82(26)	- (51)	- (39)	- (99)
경남 창원시	1.82(27)	- (56)	- (85)	- (90)
전북 진안군	1.82(28)	- (150)	- (173)	1.87(6)
전남 나주시	1.81(29)	- (49)	- (71)	- (63)
울산 울주군	1.81(30)	1.48(26)	- (46)	- (56)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년도.

주 1: 2000년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년도의 순위임.

주 2: 북제주군은 2007년에는 제주시로 통합되어 순위 자료가 없음.

〈표 15〉 합계출산율 하위 30개 지역의 변화(2000·2003·2005·2007년)

(단위: 명)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대구 중구	0.93(1)	0.82(3)	0.72(3)	0.97(14)
부산 동구	1.05(2)	0.89(10)	0.73(6)	0.88(7)
서울 강북구	1.07(3)	0.99(27)	0.85(18)	1.02(23)
부산 영도구	1.08(4)	0.91(11)	0.73(5)	0.87(6)
서울 종로구	1.08(4)	0.89(9)	0.76(7)	0.86(4)
부산 서구	1.09(6)	0.91(12)	0.79(10)	0.86(3)
부산 수영구	1.10(7)	0.81(1)	0.85(17)	0.95(12)
서울 강남구	1.11(8)	0.82(2)	0.71(2)	0.85(2)
서울 서초구	1.12(9)	0.87(5)	0.82(3)	0.95(11)
서울 중구	1.12(9)	0.92(16)	0.88(2)	- (31)
서울 동대문구	1.14(11)	0.92(15)	0.87(9)	1.00(20)
대구 남구	1.14(12)	0.93(17)	0.80(12)	0.91(9)
부산 중구	1.14(13)	0.88(8)	0.70(1)	0.84(1)
인천 동구	1.14(14)	- (40)	- (46)	- (46)
부산 동래구	1.16(15)	0.91(13)	0.78(8)	0.96(13)
부산 연제구	1.18(16)	0.99(26)	0.84(15)	0.99(18)
부산 남구	1.19(17)	1.00(29)	0.88(22)	1.00(21)
서울 서대문구	1.20(18)	- (32)	0.89(24)	1.00(22)
서울 성북구	1.20(18)	0.98(22)	- (33)	- (41)
광주 동구	1.20(18)	0.88(7)	0.72(4)	0.87(5)
부산 금정구	1.20(18)	0.95(19)	0.79(9)	0.94(10)
서울 용산구	1.20(18)	0.94(18)	0.88(21)	1.06(29)
부산 부산진구	1.20(18)	- (34)	0.91(30)	1.06(30)
경북 군위군	1.21(24)	0.98(24)	- (222)	- (201)
서울 마포구	1.22(25)	0.91(14)	0.89(25)	- (36)
서울 중랑구	1.22(26)	0.95(20)	0.91(28)	1.04(25)
대구 서구	1.23(27)	1.00(30)	0.79(10)	0.89 (8)
경북 청도군	1.24(28)	0.88(6)	0.85(16)	- (66)
서울 관악구	1.24(28)	0.98(21)	0.90(27)	1.00(19)
서울 양천구	1.25(30)	- (43)	- (40)	- (43)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해당년도.

주: 2000년 기준이며,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년도의 순위임.

〈표 16〉 시군구별 출산 가구의 자녀수 구성 비율의 차이

구분	2000년			2003년			2005년			2007년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한 자녀	두 자녀	다 자녀
최소값	35.9	32.7	5.9	35.2	29.9	6.6	38.0	26.4	4.7	34.8	27.2	4.8
최대값	59.1	49.6	27.5	59.0	46.4	27.0	62.5	44.2	26.5	64.1	48.2	27.6
평균	45.3	41.6	13.2	46.6	40.4	12.9	49.0	38.0	13.0	51.2	36.5	12.3

자료: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해당년도.

VI. 결론

우리나라도 다른 산업 사회와 마찬가지로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경제활동참여가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과거의 경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49세 여성의 경우 교육수준별·직업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동안 낳는 총출생아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일관되게, 여성의 경우 연령대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경제활동인구나 실업자에 비해 취업자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최근 동향에 의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교육수준이 낮은 인구 집단과 농림어업직군에서 급속하게 출산력이 감소하여 출산율의 하향평준화 경향이 관찰된다.

혼인·출산의 선택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하위 인구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상태나 직업에 있어서 남녀 차가 심할 뿐 아니라 여성 간에도 결혼과 자녀 출산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혼 여성은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전문직 비율 등에서 다른 집단과, 특히 다른 여성 집단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혼인과 출산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력이 뚜렷한 상황은 자발적인 비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의 미혼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미혼율이 높다. 2000년 25~29세 여성 중 40%가 미혼이던 것이 2005년에는 60%로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미혼율이 30~34세는 10.5%에서 19.0%로, 35~39세는 4.1%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40세 이후의 출산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20~30대, 특히 30대 미혼율의 급증은 출산율의 저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된다. 그 증가 속도로 볼 때 유배우 여성의 출산율 증가만으로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 어려

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혼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배우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유배우 출산율보다는 여성의 자발적인 미혼·비혼에 영향을 줌으로써 유배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배우 출산율과 유배우율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 출산력의 변화와 원인을 살펴본 결과,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대구 중구 등은 지속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지역에서 저출산 현상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과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권의 출산율이 낮은 것은 저출산 문제와 출산 정책의 공간 불일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지만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력이 높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서 저출산 정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2000년 이후 최근 동향에 의하면 시군구별 다자녀 비율은 시계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자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두자녀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의 저출산 문제가 다자녀 비율의 감소보다는 두자녀 비율의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권태환(2008). 출산의 현황과 전망, pp.3-31, 한국의 인구·주택, 통계개발원, 190-216.
- 김보경·김한근(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6(2), pp.45-73.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최형재(2008). 자녀교육과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
- Boyle, P.(2003). Population geography: does geography matter in fertility research.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7(5), pp.615-626.
- Chesnais, J. C.(1996).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pp.729-739.
- MacDonald, P.(2000).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7(1), pp.1-26.

발표 3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

우남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김영심 [한국사이버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저출산 시대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모의 인식⁵⁾

우남희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김영심 (한국사이버대학교 아동학부 교수)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우려를 넘어 대재앙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도 6월 신생아 수는 3만 4,200명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800명(2.3%)이 줄었다. 그동안 출생아 수가 결혼 특수년이었던 쌍춘년인 2006년 2월에 4.8%가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보인 뒤, 2007년 황금돼지해를 거치면서 2008년 2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3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후 급격한 하락세를 타고 있다(서울신문, 2009. 8. 20).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도 1970년에 4.53명이던 것이 1974년에 3.81명, 1983년에 2.08명으로 하락해오다 2004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1.15명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떨어졌다가 2006년에는 1.12명, 2007년에 1.25명으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다시 1.19명으로 감소했다(서울경제, 2009. 8. 13).

대부분의 선진국이 산업화와 함께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사회발전수준이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다시 출산율이 증가하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국은 예외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연구 센터가 1975년부터 2005년도까지 37개국의 인간개발지수(HDI, 최고치는 1.0)⁶⁾와 여성의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진국에서는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이 일하는 환경이나 보육시설이 향상되어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들이 늘어나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인간개발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09. 8. 6).

그렇다면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여성의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확대되고 경제적으로도 맞벌이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실제적으로 저출산을 야기하는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혼이나 자녀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5) 본 논문은 2009년 미래유아교육학회지(16권 3호) 논문 중 일부임.

6) 인간개발지수: 유엔개발계획이 매년 1인당의 국내총생산(GDP)이나 평균수명, 문맹퇴치율, 취학률 등을 토대로 산출하는 지수로 각국의 삶의 질과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적으로 결혼과 더불어 자녀를 낳았을 경우 양육의 문제는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조부모가 자녀양육의 대안이 되지 못하며 따라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영아를 둔 맞벌이 부모들에게는 매우 심각하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아이를 미루다 결국은 무자녀 가족을 이루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 및 교육비도 부모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된다.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자녀를 더 잘 키우려는 부모의 노력은 과도한 양육비의 지출을 야기한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면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또 다시 교육비(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된다. 손승영(2005)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양육비용과 교육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하게 높고 그것이 가계에 막대한 부담을 주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는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이 서울에 사는 만 25-44세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및 자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응답(28.1%)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 불황으로 취업이 어렵고 직장이 불안정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등 경제적 요인이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김경철, 2008).

‘새로마지플랜 2010’의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으로 가구 소득수준과 관계가 없이 모든 가구에서 영유아보육비와 초중고 자녀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6). 서울시 산하 여성가족재단이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자녀교육비 부담(28.1%), 자녀 양육비 부담(17.2%)이라는 응답이 45.3%를 차지하였다(조선일보, 2008, 10. 28).

1980년대 이후 소득의 증가와 자녀수의 감소는 자녀 양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기형적인 교육열의 증가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졌다. ‘적기교육’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모들은 무조건 빨리만 시작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글, 영어 등 각종 조기교육에 노출시킴으로 조기교육 과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90% 이상이 영어, 예체능, 각종 인지 발달프로그램 등의 특별활동을 하고 있다. 더구나 70% 이상은 방과 후가 아닌 정규 일과 중에 특별활동을 하고 있어 특별활동은 유아교육기관의 정규일과가 되어가고 있고 학업위주의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이명조, 정선아, 이정화, 2003).

조기교육과 아동발달을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서유현, 2006; 신의진, 2002; 우남희, 2002; 황혜정, 2006; Elkind, 1983; Kessler, 1997)은 조기교육이 아동의 인지발달, 창의성 발달, 사회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이러한 연구

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경쟁을 부추기고 자존심을 자극하는 상업적인 광고나 선전에 이끌리어 자녀교육을 내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조기교육의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사교육비용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7).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의하면 2008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가 20조 9천억원으로 2007년도 20조 400억원에 비해 4.3% 증가하였다(연합뉴스 2009. 2. 27). 이러한 시장규모의 증가는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현재 어린 자녀를 둔 가정마다 양육비와 사교육비로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이유가 저출산의 첫번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할 적극적인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저출산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물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을 꺼려할 만큼의 경제적 부담이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는 일은 저출산 방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현재 자녀의 양육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자녀양육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는 있지만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 자신들의 기대나 인식의 변화 없는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다.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각자 자기 자녀에게 맞는 육아와 교육을 실시할 때 사교육으로 낭비되고 있는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육아정책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맞벌이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신념과 기대, 그리고 실제로 어떠한 양육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보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저출산의 요인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비와 사교육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기본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1-1. 자녀 양육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1-2. 자녀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2-1.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실태는 어떠한가?

2-2. 우리나라의 자녀교육 및 사교육의 실태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0세부터 만 11세 자녀를 둔 부모 931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 산후조리원 2곳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19곳, 초등학교 3곳을 임의 선정 후, 기관장과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연구대상을 표집 하였다.

2. 연구방법

1) 부모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및 실태조사 설문지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요구 및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용 설문지를 마련하였다. 이 설문지는 우남희, 현은자, 이종희(1993)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조기특기/과외 교육에 관한 실태 조사 설문지를 기초로 박수진(2001), 이기숙 외(2001), 우남희, 백혜정, 김현신(2005) 등의 연구에서 수정하여 사용한 설문지들을 종합하여 다시 제작하였다.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치고 아동발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설문지를 최종 수정 보완 하였다.

우선,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 내용은 자녀 양육 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 타인 양육 시 드는 비용,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등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자녀 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교육의 종류, 기본생활습관 및 인성 교육 방법, 사교육에 대한 찬반 여부, 유아 및 아동에게 적절한 사교육 가짓수,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될 수 있는 적절한 사교육비용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III. 연구 결과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인식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

자녀 양육 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 연구대상 부모들 중 40.1%가 ‘유

아기'를 가장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출생에서 첫돌까지'(27.3%), '아동기'(19.8%)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들이 생각하는 필요시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6) = 171.380, p < .001$). 즉, 신생아기와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출생에서 첫돌까지'를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 이후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기'를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자녀 양육을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길 경우에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비용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월평균 43.91만원($SD = 28.57$)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녀 연령에 따라서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비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4, 893) = 5.279, p < .001$). Duncan 사후검정 결과, 저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타인 양육비용이 다른 연령대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비용보다 많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녀 양육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 및 안전'(53.3%)이었으며, 그 다음이 '인성'(44.9%)이었고, '지식'이나 '특기개발', '학벌'에 대해 생각하는 어머니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저출산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하여, 복수응답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는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이유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교육비 부담'(59.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부담'(49.9%), '아이 맡길 곳 없음'(34.3%)의 순이었다. 이러한 저출산의 이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생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8) = 65.744,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생아기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출산의 이유 중 '양육비 부담'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있었다. 즉,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출산의 이유를 '양육비 부담'(63.3%), '사교육비 부담'(55.0%), '아이 맡길 곳 없음'(25.0%) 순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저출산의 이유를 '양육비 부담'(54.4%), '아이 맡길 곳 없음'(51.5%), '사교육비 부담'(47.1%) 순으로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를 포함하여 그보다 높은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양육비 부담'은 그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 1〉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복수응답 (N = 929)

(단위: 사례수, %)

이유	자녀연령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전체
어머니의 자아실현	6 (10.0)	28 (20.6)	49 (20.5)	57 (23.1)	34 (13.8)	174 (18.7)
양육비 부담	38 (63.3)	74 (54.4)	128 (53.6)	107 (43.3)	117 (47.4)	464 (49.9)
사교육비 부담	33 (55.0)	64 (47.1)	145 (60.7)	162 (65.6)	149 (60.3)	553 (59.5)
몸이 힘들	0 (0.0)	17 (12.5)	27 (11.3)	32 (13.0)	24 (9.7)	100 (10.8)
자녀 중요치 않음	3 (5.0)	5 (3.7)	9 (3.8)	10 (4.0)	13 (5.3)	40 (4.3)
아이 맡길 곳 없음	15 (25.0)	70 (51.5)	95 (39.7)	85 (34.4)	54 (21.9)	319 (34.3)
부부만의 시간 추구	7 (11.7)	10 (7.4)	11 (4.6)	31 (12.6)	21 (8.5)	80 (8.6)
육아 시간 부족	3 (5.0)	26 (19.1)	36 (15.1)	37 (15.0)	20 (8.1)	122 (13.1)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

먼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시켜야 할 교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은 ‘기본생활습관 교육’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57.0%), 그 다음으로 ‘인성교육’(38.4%)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시켜야 한다고 생각되는 기본생활 습관 및 인성교육에 대해 연구대상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연스럽게’(77.3%)시켜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22.1%나 차지하고 있었다.

사교육에 대한 어머니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인 영·유아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의 반응 결과,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중 77.3%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유아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들의 이러한 생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chi^2(4) = 2.577, p > .05$).

영·유아기에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평균 약 두 가지의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7가지의 사교육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있었다. 영·유아들에게 시키는 적정 조기 사교육의 가짓수에 대한 어머니들이 생각이 자녀의 연령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 사교육의 걱정 가짓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4, 675) = 2.499, p < .005$). Duncan 사후검정결과는 영아기의 어머니들이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어머니들의 생각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적 결과는 영아기의 어머니들이 다른 시기의 어머니들보다 조기사교육을 조금 덜 시키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치상으로는 모든 연령에서 평균 2가지의 조기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걱정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질문에는 한 달에 평균 약 18만원 정도의 지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어머니도 2명이나 있어 이러한 어머니들의 생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F(4, 675) = 2.499, p < .001$). 영아기와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월 지출 약 13~15만원이 자녀 일인당 사교육 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신생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어머니들은 약 20~22만원이 일인당 월 사교육비용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실태

1)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양육 실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녀 양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어머니들에게 현재 자녀의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자녀 양육 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아직 실제적인 양육 경험이 부족한 신생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앞으로의 계획이나 예상을 반영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을 분석하면, 연구대상 부모들은 현재 자녀들의 주 양육자를 ‘어머니’(81.5%)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척’(8.1%), ‘양육기관’(7.0%)의 순이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힘들 것이라 예상되는 시기 혹은 힘들었던 시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출생~첫돌까지’(34.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말하고 걷기 시작하는 시기’(24.3%), ‘유아기’(2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생각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χ^2 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양육 시 힘들었던 시기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12) = 160.111, p < .001$). 즉,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장 힘들 것이라 예상되거나 혹은 가장 힘들었던 시기로, ‘출생~첫돌까지’를 꼽았으며, 그 다음이 ‘말하고 걷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이와

달리, 초등학교의 어머니들은 ‘아동기’가 키우기 힘든 시기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특히 고학년 부모들 중에서는 35.0%가 ‘아동기’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현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힘든 점 혹은 힘들 것이라 예상되는 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양육 및 사교육비용’(55.8%)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엄마를 대신할 양육자 선정’(15.9%), ‘적절한 양육 방법 모름’(14.5%)의 순이었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hi^2(20) = 113.951, p < .001$). 신생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경우, 모두 ‘양육 및 사교육비용’이 자녀 양육에서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양육자 선정’의 문제였고(30.5%), 그 다음이 ‘양육 및 사교육비용’이었다(27.3%). 이 외에도 ‘적절한 양육 방법 모름’에 대한 응답의 빈도도 높게 나타났다(23.4%)(표2 참조).

〈표 2〉 자녀 양육 시 힘들었던 점(N = 919)

(단위: 사례수, %)

자녀연령 힘든 점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전체
양육 및 사교육비	34(57.6)	35(27.3)	120(50.8)	168(67.5)	156(63.2)	513(55.8)
양육자 선정	12(20.3)	39(30.5)	47(19.9)	25(10.0)	23(9.3)	146(15.9)
부부간 양육관 차이	0(0.0)	7(5.5)	15(6.4)	9(3.6)	15(6.1)	46(5.0)
양육방법 모름	12(20.3)	30(23.4)	24(10.2)	34(13.7)	33(13.4)	133(14.5)
양육기관 선정	1(1.7)	13(10.2)	24(10.2)	3(1.2)	6(2.4)	47(5.1)
기타	0(0.0)	4(3.1)	6(2.5)	10(4.0)	14(5.7)	34(3.7)
전체	59(100.0)	128(100.0)	236(100.0)	249(100.0)	247(100.0)	919(100.0)

2)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및 사교육 실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및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대상 어머니들에게 자녀에게 제일 먼저 시킨 교육의 종류와 교육 시 인성교육의 비중,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 현재 자녀들의 사교육 실시여부, 현재 자녀들이 받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 가짓수, 사교육비용에 대해 설문지를 통하여 질문을 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시킬 계획이거나 시켰던 교육의 종류는 <표 3>과 같다. 앞에서,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시켜야할 교육에 ‘기본생활습관교육’을 꼽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교육 실태에서도 어머니들은 ‘기본생활습관교육’(62.4%)을 가장 먼저 시킬 계획이거나 시켰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인성교육’(21.1%)이었으며, 학습과 관련된 나머지 항목들은 10% 이하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 3〉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교육 (N = 912)

(단위: 사례수, %)

종류 \ 자녀연령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	전체
한글	8(13.6)	5(3.9)	12(5.2)	21(8.5)	35(14.3)	81(8.9)
예능	1(1.7)	3(2.3)	7(3.0)	8(3.2)	12(4.9)	31(3.4)
체육	0(0.0)	1(0.8)	10(4.3)	7(2.8)	3(1.2)	21(2.3)
외국어	10(16.9)	0(0.0)	0(0.0)	6(2.4)	2(0.8)	18(2.0)
기본생활습관	29(49.2)	95(73.6)	148(63.5)	153(61.9)	144(61.6)	569(62.4)
인성교육	11(18.6)	25(19.4)	56(24.0)	52(21.1)	48(19.7)	192(21.1)
전체	59(100.0)	129(100.0)	233(100.0)	247(100.0)	244(100.0)	912(100.0)

그러나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기본생활습관교육’이나 ‘인성교육’을 가장 먼저 시키고 있다고 응답한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교육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혹은 할애할 예정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어머니들은 ‘일반사교육보다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5.3%에 불과하였고 ‘아니다’라는 응답이 27.5%였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7.2%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어머니들이 기본생활습관을 위한 교육이나 인성교육을 우선으로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사교육을 위하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답 비율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연령에 따라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에 대한 시간 할애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6) = 113.960$, $p < .001$). 신생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다른 시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보다 가장 많이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을 위해 사교육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응답하였다(57.7%). 이에 비해 저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에서는 16.2%만이 사교육보다 인성교육이나 기본생활습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분석해보면,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보다는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설문지를 통하여 신생아들의 어머니들에게는 영·유아기 자녀들을 둔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다. 또한,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현재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에서는 56명(93.3%)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이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어머니들에게는 실제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 결과는 표 15와 같다. 즉, 영아기 이상의 자녀를 둔 연구대상 어머니들 중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설문에 응답한 어머니는 719명(83.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여부에 있어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3) = 308.923,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정도가 34.6%에 지나지 않았지만, 유아기 자녀에게는 77%, 저학년기와 고학년기에 속하는 자녀에게는 98.4%정도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자녀들의 사교육 여부(N = 871)

(단위: 사례수, %)

적절성 \ 자녀연령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	고학년	전체
예	47(34.6)	184(77.0)	245(98.4)	243(98.4)	719(83.2)
아니오	89(65.4)	55(23.0)	4(1.6)	4(1.6)	152(16.8)
전체	136(100.0)	239(100.0)	249(100.0)	247(100.0)	871(100.0)

현재 자녀들에게 몇 가지를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우리나라 영유아기 자녀들이 몇 가지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약 2.5개(SD = 0.83)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실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 전·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였을 때, 그들은 자녀 한 명에게 최소 1개에서 최대 7개까지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평균 약 3.01(SD = 1.58)개의 사교육을 시킨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가짓수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 연구 대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현재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 713) = 61.220, p < .001$). 이러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Duncan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영아기의 자녀들이 평균 1.53개(SD = 0.91)로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기의 자녀들이 평균 2.28개(SD = 1.36)로 두 번째로 적게 받고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연령은 저학년기로, 현재 저학년기의 자녀들은 평균 3.85개(SD = 1.59)의 사교육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현재 자녀 한명에게 시키는 사교육 가짓수

자녀연령	n	M	SD	F	p
영아	47	1.53a	0.91	61.220***	.000
유아	184	2.28b	1.36		
저학년	244	3.85d	1.59		
고학년	243	3.13c	1.45		

***p < .001.

현재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종류를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평균 7.27개(SD = 5.38)의 사교육을 시켰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가짓수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따르면, 영아기의 자녀들에게 평균 1.29개(SD = 1.79), 유아기의 자녀들에게 평균 4.81개(SD = 4.01)의 사교육을 출생부터 현재까지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 중 지금까지 최대 22개의 사교육을 시켰다고 응답한 어머니도 있었다. 저학년기와 고학년기 자녀에게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종류는 평균 9~11개로 나타났으며, 최소 1개에서 최대 29개의 사교육을 아동기의 자녀들에게 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자녀 한명에게 출생부터 지금까지 시킨 사교육의 가짓수

자녀연령	n	최소값	최대값	M	SD
영아	47	0	9	1.29	1.79
유아	184	0	22	4.81	4.01
저학년	244	2	29	9.88	4.58
고학년	243	1	23	10.30	4.72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최초로 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사교육의 종류에 대한 질문에서 이 어머니들은 현재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제일 먼저 시키는 사교육의 종류로, ‘한글’(30.0%)이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영어’(18.3%), ‘종합학습지’(5.0%), ‘신체놀이’(3.3%) 순으로 응답하였다. 실제,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기, 고학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녀에게 최초로 시킨 사교육의 종류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생각했던 바와 거의 일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 7>과 같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최초로 시킨 사교육의 종류를 빈도수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한글’(30.5%), ‘영어’(12.3%), ‘종합학습지’(11.8%), ‘신체놀이’(9.8%) 순이었다.

〈표 7〉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시킨 사교육의 종류 (N = 731)

(단위: 사례수, %)

종류 \ 자녀연령	영아기	유아기	저학년	고학년	전체
한글	18(28.6)	65(33.2)	72(29.9)	68(29.4)	223(30.5)
영어	1(1.6)	14(7.1)	37(15.4)	38(16.5)	90(12.3)
종합학습지	11(17.5)	24(12.2)	22(9.1)	29(12.6)	86(11.8)
신체놀이	9(14.3)	27(13.8)	24(10.0)	12(5.2)	72(9.8)
피아노	1(1.6)	5(2.6)	18(7.5)	32(13.9)	56(7.7)
미술	2(3.2)	14(7.1)	19(7.9)	17(7.4)	52(7.1)
가페, 은물, 오르다	3(4.8)	13(6.6)	15(6.2)	7(3.0)	38(5.2)
태권도	0(0.0)	1(0.5)	10(4.1)	7(3.0)	18(2.5)
음악교육	2(3.2)	7(3.6)	3(1.2)	2(0.9)	14(1.9)
수영	0(0.0)	1(0.5)	6(2.5)	6(2.6)	13(1.8)
무용	0(0.0)	5(2.6)	4(1.7)	2(0.9)	11(1.5)
몬테소리	3(4.8)	4(2.0)	3(1.2)	0(0.0)	10(1.4)
창의성	0(0.0)	8(4.1)	0(0.0)	1(0.4)	9(1.2)
영재교육	2(3.2)	0(0.0)	1(0.4)	1(0.4)	4(0.5)
기타	11(17.5)	8(4.1)	7(2.9)	9(3.9)	35(4.8)
전체	63(100.0)	196(100.0)	241(100.0)	231(100.0)	731(100.0)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32.68개월 (SD = 14.22)일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실제 현황을 살펴본다면, 영아기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평균 23.11개월(SD = 14.34)에 처음으로 사교육을 시켰으며, 유아기의 어머니들은 37.19개월 (SD = 15.20), 저학년기의 어머니들은 50.17개월(SD = 22.12), 고학년기의 어머니들은 55.25개월(SD = 21.74)에 처음으로 사교육을 시켰다고 응답하여 연령이 내려 갈수록 일찍부터 사교육을 시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8〉은 자녀의 연령별 사교육비 지출액과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단, 신생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이 아닌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영·유아기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를 예상한 값으로, 신생아기 어머니들은 평균 33.41만원(SD = 41.76)을 월 사교육비로 예상하고 있었다. 실제 사교육비 지출액을 적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 자녀를 둔 가정의 교육비를 살펴보면,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평균 16.32만원을 지출하는 데 반해, 아동기에는 거의 100만원에 근접하는 돈을 매달 지출하고 있었다. 특히, 아동기의 자녀를 둔 부모 483명 중 월평균 사교육비로 300~500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 22명(4.6%)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높은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많아질 뿐 아니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도 같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부모들의 사교육비 지출과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 평균(SD)

구분	최소값	최대값	월 사교육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율
신생아기 (n = 49)	7만원	300만원	33.41만원 (41.76)	13.33% (15.78)
영아기 (n = 68)	0원	150만원	16.32만원 (23.69)	4.08% (5.47)
유아기 (n = 201)	0원	350만원	39.05만원 (48.92)	8.22% (8.63)
저학년 (n = 244)	4만원	500만원	90.86만원 (72.04)	16.68% (14.95)
고학년 (n = 239)	0원	400만원	97.31만원 (75.33)	20.70% (27.12)
총 (n = 801)	0원	500만원	69.94만원 (70.27)	14.44% (18.84)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날로 심각해져가는 저출산의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증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와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를 분석한 내용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아직까지 ‘어머니’ 위주의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어머니’를 자녀의 주 양육자로 응답한 비율이 평균 81.5%였다는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대리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생아기와 영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는 ‘출생에서 첫돌까지’를 가장 필요한 시기로 보았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유아기에 어머니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동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유아기와 아동기를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시기로 보았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양육 및 사교육비’의 부담이었다. 이는 취업모가 늘어나면서 타인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 할 수 없이 민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거나 개인택이를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양육비가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또한 나날이 과열되는 교육열에 사교육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녀양육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양육비와 교육비의 경제적 부담이 결국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들(김영주, 2005; 손승영, 2005; 차경옥, 2004)과 함께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한 대리 양육자를 선정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양육방법을 몰라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30% 이상의 어머니들이 어머니를 대신할 양육자 선정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하였다. 대리 양육자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취업을 하기 위하여 대리 양육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도 해석이 된다. 현재 어린이집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나 양적인 증가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도 이루어져서 어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관들이 늘어날 때 어머니들의 출산율도 증가하고 취업률도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 취업모에게는 적절한 양육방법을 배울 기회를 없으므로 취업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양육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리라 본다.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에 관한 분석 결과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기본생활습관 교육과 인성교육(95.4%)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교육보다 인성교육 등을 더 많이 시킨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25.3%에 불과하였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본생활습관이나 인성교육보다는 일반 사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다양한 학원을 전전하며 다니는 유아들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본 연구에서 영아기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 중 83.2%가 실제로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98.4%가 사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자녀 한명에게 시키고 있는 사교육의 가짓수도 평균 3가지로 최소 한 가지에서 최대 일곱 가지의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제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생활 패턴 속에서 떼어 낼 수 없는 일부가 되어버렸다.

사교육비용으로는 13~21만원이 적절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교육비용으로는 월평균 약 70만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가정까지 포함하여 평균을 낸 것이므로 실제로 사교육을 시키는 아동만 분석한다면 일인당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사교육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가정도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용이 늘어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사교육비용으로 한달에 평균 97만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08년 학생 1인

당 사교육비가 23만 3천원(연합뉴스 2009. 2. 27)이라는 것보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어머니들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사교육 비용과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가계 소득대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여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 결국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본다.

풀 휴잇은 한국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성공하지 못하면 2100년에 인구가 3분의 1 이하로 줄고, 2200년에 140만명으로 궁극적으로 지구에서 한국인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동아일보, 2009, 2. 14). 현재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양육비 및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 부담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양육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 또한 취업여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휴가를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자녀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국가의 중요한 시책으로 현재 다양한 연구가 거듭되고 있으나 실제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일부 학자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의 생각만으로 사회 전체에 팽배해 있는 사교육의 병폐를 줄일 수는 없다. 현재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여 매스컴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과대 상업적 광고에 대한 규제도 시급하며,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정신병리적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특히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있는 사교육기관, 특히 소위 영어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영어학원의 기하학적인 교육비에 대한 국가의 철저한 감독과 유아대상 영어 교육의 실태에 대한 분석도 시급하다. 특히 영어교육을 위한 지출이 사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어 사교육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교육과 입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철(2008). 저출산사회의 교육정책 방안.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주(2005).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149~157.
- 박수진(2001). 유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조기 특기교육에 관한 실태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유현(2006). 아동발달과 뇌발달의 이해.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건강한 아동, 건강한 뇌, pp.3~12.
- 손승영(2005).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 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pp.285~316.
- 신의진(2002). 조기교육과 발달 병리적 문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조기교육의 현황과 과제, pp.27~42.
- 우남희·백혜정·김현신(2005). 조기 사교육이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치원 원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5(1), pp.5~24.
- 우남희·현은자·이종희(1993). 시설학원과 가정 중심의 조기교육 실태연구. 유아교육연구, 13, pp.49~64.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홍용희(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 이명조·정선아·이정화(2003). 한국 유아의 조기교육. 집문당.
- 차경옥(2004). 출산계획과 출산계획 있는 가계의 경제구조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pp.137~148.
- 황혜정(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pp.193~216.
- 동아일보. 한국 인구감소, 경제적 재앙 부를것. 2009. 2. 14.
- 서울경제. 저출산의 진정한 해법. 2009. 8. 13.
- 서울신문. 저출산 고령화. 2009. 8. 20.
- 세계일보. 선진국 출산율 반등...한일만 '예외'. 2009. 8. 6.
- 조선일보.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인식. 2008. 10. 28.
- 연합뉴스. 사교육비 증가 우려가 현실로. 2009. 2. 27.
- Elkind, D. (1983). *The Hurried Child*. Perseus Books Group.
- Kessler, R. C. (1997). The effect of stressful life events on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pp.191~214.

발표 4 저출산 대책과 아동보육 문제

이 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저출산과 아동보육 문제

이 옥 (덕성여대 아동가족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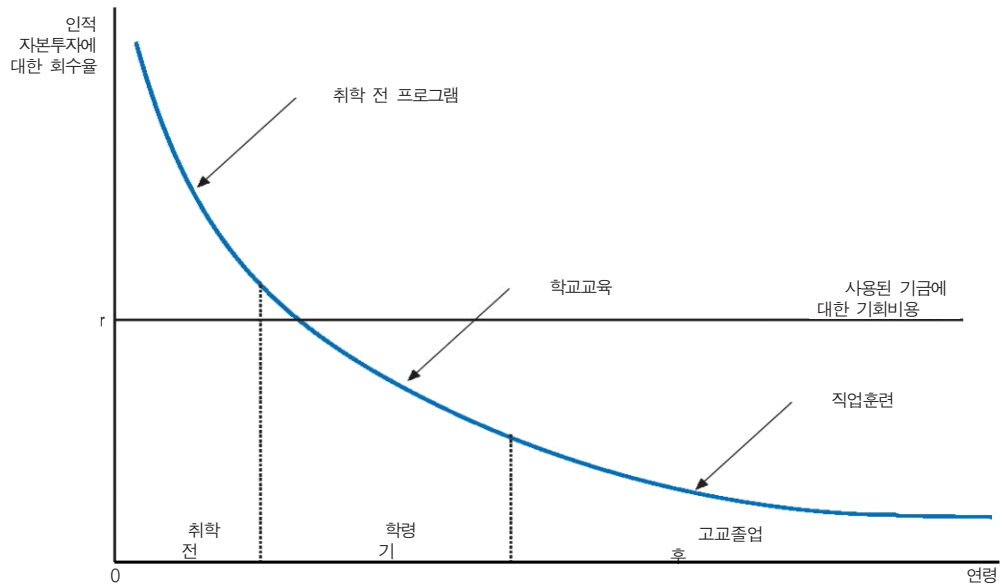
1. 보육에 대한 정부개입의 중요성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문제와 고령(화)사회로의 진입 등을 우리보다 앞서 경험한 국가들 가운데, 특히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한 국가에서는 육아에 대한 국가(정부)의 개입이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추진되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후 여성 취업의 증가와 출산력 저하를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나, 1991년에 이르러서야 보육이 제도화됨으로써 정부가 육아에 개입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에 1.19이며,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09년 자료에 의하면 1.22로 세계 최하위권이다.

한국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과 가족가치관의 변화, 여성 취업 인구의 증가,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 직업 안정성의 약화, 입직 연령과 초혼 연령의 증가, 그밖에 주택가격의 상승 등 경제 상황도 저출산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의 경기불황과 취업난도 당분간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결국 자녀 양육으로 인해 일을 포기하거나 자녀 양육 자체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산을 유예, 또는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육아에 개입한다는 것은, 일과 양육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자녀양육을 지원하고, 분담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지만, 생애초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에게 양육의 권리와 일할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여 여성노동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리고 생애 초기 사회적 투자를 통한 빈곤아동 문제의 완화를 위해, 정부의 육아 책임 분담과 육아지원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영유아기 자녀양육 지원의 대표적 시스템인 ‘보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처음에는 여성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리보호의 형태로 시작된 것이지만,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결과는 재정투자 회수율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Cunha et al., 2006). 그림 1에 제시했듯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한 정부개입의 효과는 생애 어느 시기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에 비해 효과적이다.

[그림 1] 전 생애동안 투자가 동일하게 이루어졌을 때, 인적자본 투자대비 회수율



자료: Cunha et al. (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n life cycle skill formation

저출산으로 인한 여성 노동력 활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보육 인프라 확충이 취업 여성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취업모의 노동이 생애노동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여성 연령별 취업률이 M자형의 곡선을 나타내는 정도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여성의 직장생활 지속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지원책은 보육시설 확대 정책이다. 취업여성 59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 결과(김선희, 2007 재인용)를 보면, 여성취업 지속을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가장 필요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 그중에서도 공공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여성의 직장생활 보장을 위해 우선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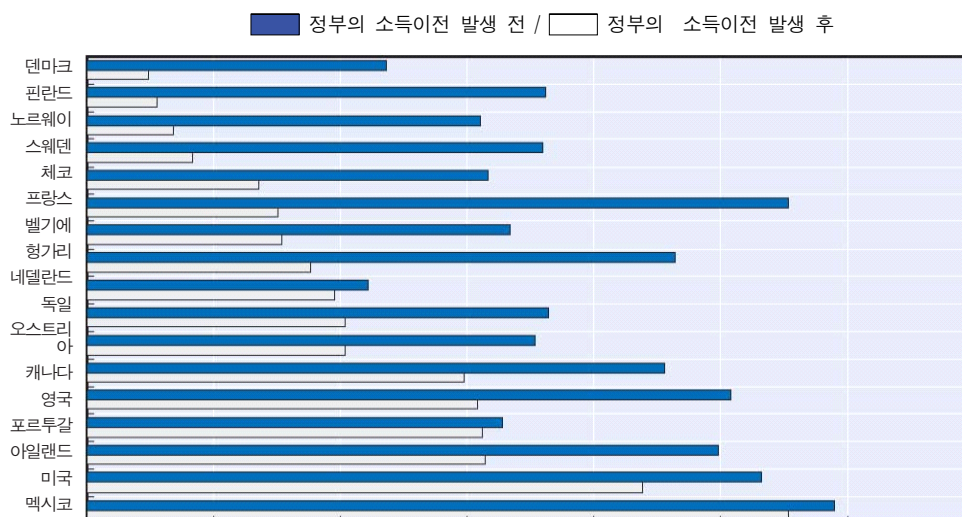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전체	성별	
		여성	남성
직장보육시설 확대	422(70.7)	227(72.3)	195(68.9)
가족들의 가사노동 분담	77(12.9)	38(12.1)	39(13.8)
기업의 적극적 여성고용	38(6.4)	21(6.7)	17(6.0)
여성 스스로 능력개발	26(4.4)	8(2.5)	18(6.4)
기타	6(1.0)	4(1.3)	2(0.7)
무응답	28(4.7)	16(5.1)	12(4.2)
계	597(100.0)	314(100.0)	283(100.0)

자료: 김선희(2007).

또한, 정부의 보육에 대한 지원은 빈곤아동의 문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국의 소득이전 정책 효과를 비교한 연구 결과(그림 2 참조)를 보면,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실시한 북유럽 국가와 프랑스 등에서 정책의 빈곤 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2006)는 가족의 빈곤이 보육 서비스의 부재와 관련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거나, 이용가격이 비싸거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을 때, 한 부모 가족과 저소득 가정 등이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한다(OECD, 2006). 정부의 영유아 보육지원이 빈곤아동 문제 완화 정책으로서도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2〕 사회적 이전이 아동빈곤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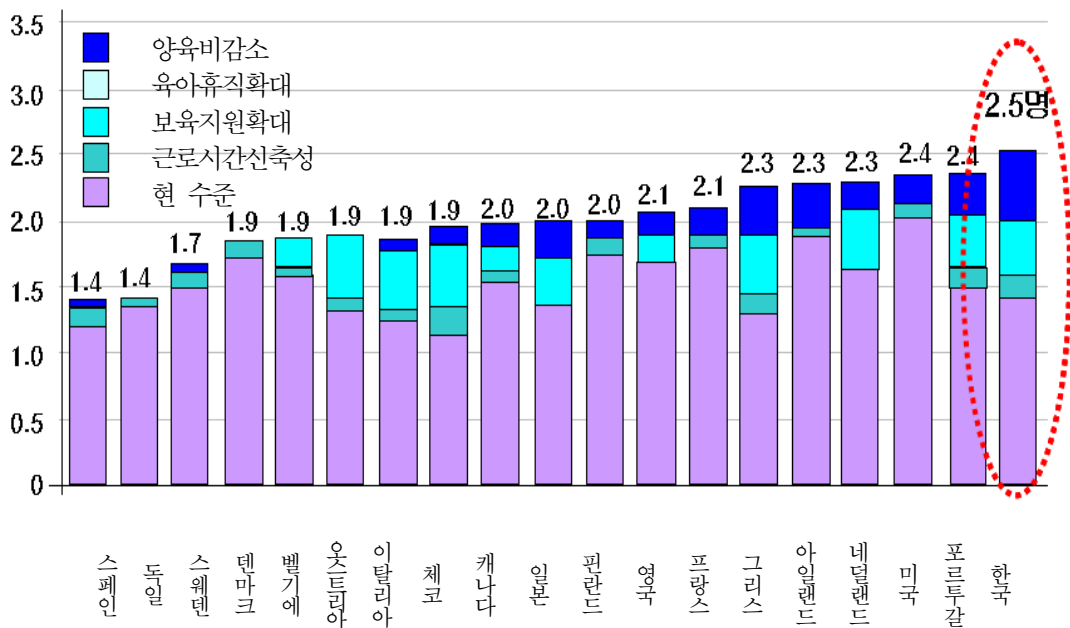
자료: OECD(2006).

II. 저출산 위기와 보육지원 정책의 중요성

여성취업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보육지원 정책이 없이 출산률 제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UN의 한 보고서는 각국의 출산율 개선율이 보육서비스 지원을 포함한 가족정책 재정지출(가족당장, 육아휴직급여, 보육서비스, 자녀교육지원 포함) 규모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홍현호, 2009, 재인용). 이는 보육지원을 포함한 육아지원 재정 투자가 저출산 국가들의 출산율 제고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증거다. 출산율 개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보육지원 정책이 적극적인 나라들이며, 수십 년 전부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포괄적인 보육지원 제도를 수립한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 1.98을 나타내고 있다. 보육을 포함한 육아지원 정책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OECD 대표부의 d'Addio(2005) 역시 저출산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나라의 실증자료 분석을 근거로 하여, 아동보육 인프라와 탄력근무제, 양육비 지원 관련 정책적 노력이 한국의 출산율을 크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지적 한 바 있다. 또한 적정비용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는 출산율 증가 뿐 아니라 여성의 노동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OECD 자료는 보육서비스 1% 증가 시 출산력 0.01 명 증가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육아 지원 프로그램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그림 3]과 같이 추정된다(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재인용).

[그림 3] 육아지원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



그 밖에도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육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최근 독일의 가족정책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전통적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알려진 독일은 최근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0-3세 아동의 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정책 개입을 공식화하였다(정재훈, 2008). 여성취업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육시설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은 출산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전통적 복지제도인 각종 수당제도는 저소득 계층의 출산장려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으나, 고학력 여성들에게는 출산기피 현상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각종 수당제도보다는 보육인프라 확충 정책이 중산층 고학력 여성의 출산과 경제활동 병행에 효과적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되었다.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보육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III.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OECD)

각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보육정책 연구들(Cancian, Kurz, London, Reviere & Tuominen, 2002; d'Addio & d'Ercole, 2005; Jensen, 2002; OECD, 2006)은 소위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보육을 공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보육정책이 보육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는 국가의 보육정책과 비교해 볼 때, 출산율 지표 등에서 긍정적이다.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과 관련하여 OECD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검토단의 2차보고서(OECD, 2006)는 20개국의 1, 2차에 걸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을 평가한 결론으로서, 다음과 같은 보육정책 제안을 담고 있다.

- 1) 빈곤감소와 인생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영유아서비스를 이용 권리를 보장할 것:
여성이 직장과 육아의 책임을 병행하도록 지원할 것
- 2) 아동의 복리와 생애초기의 발달과 학습을 ECEC의 중심에 둘 것
(발달과정을 고려한 학습전략,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풍부한 학습 환경, 훈련된 교육자 등)
- 3) 보육의 책무성과 질적 수준 보장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
(중앙정부 차원의 ECEC 전문 정책부서, 적극적 교사훈련, 교육과정, 서비스에 대한 독립적 평가기관, 자문단, 통계부서 설립, 운영 등)
- 4) 보육지침서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개발할 것
- 5) 질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재원의 확보와 재정지원 확대, 합리적 재정지원 방식을 채택할 것
(서비스시설 재정지원 방식에 비해, 부모직접 지원 방식은, 우수교원 채용, 기반시설 및 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경향이 있음. 소비자 선택을 강조하는 경우, 전문서비스의 감소와 저

소득층의 서비스접근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음)

- 6) 보호와 양육을 포함하는 보편적 교육 개념으로 보육정책을 추진할 것
(소의 아동 등, 서비스 대상을 구분, 차별하지 않는 정책)
- 7) 영유아보육서비스에도 부모와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할 것
- 8)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과 전문 교육정책 수립할 것 (무자격 인력 해소 필요)
- 9) 개별적 아동발달 서비스와 초등교육 이전 1년간의 무상 보육교육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것
- 10) 민주주의 가치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할 것
(무차별의 보편적 아동교육권 보장, 경쟁학습과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배제, 아동 학습공동체 지향)

OECD가 권고하는 보육정책은 1) ‘영유아 보호와 발달적 학습의 공공성과 보편성 확대’, 2) ‘보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서비스시설지원방식의 채택’, 3) ‘아동과 부모의 참여와 민주주의 가치 지향’, 4) ‘정부의 서비스 감독권 강화’, 그리고 5) ‘보육서비스의 시장화 배제’ 정책으로 축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도 결국은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귀결된다.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의 의미에 대한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유희정 외, 2006)은 부분하지만, OECD의 관련 정책 검토의 결과로서, “보육비용의 지원이 공적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정도, 공공 보육시설이 확충되는 정도,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이 보편화되는 정도, 보육시설에서의 아동들이 경험하는 활동이 국가수준에서 표준적으로 안내되고, 이들이 보편적으로 아동들에게 제공, 경험되는 정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해 행정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정도”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정책시행 측면에서 본다면, 1) 영유아의 보육시설 접근성을 제고시켜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보육시설 설치 관련 정책, 2) 보육시설의 서비스 질 개선과 향상을 위한 관리, 감독, 평가 관련 정책, 3) 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적정화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정책의 수행 정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IV. 한국 정부의 보육정책

한국의 보육정책 현황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세 시기로 나누어 정책적 차이와 성과, 문제점 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1991년 ~ 2002년의 보육정책

한국의 보육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제도화되었으나, 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적용 이전에는 선별적인 보육료 지원만이 이루어졌을 뿐, 정책적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다만 1995년부터 1997년까지의 3년간은 OECD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민간보육시설의 양적 팽창을 유도한 보육정책이 있었을 뿐이다. 이 정책의 결과는 과도한 민간보육시설 점유율과 민간시설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의 비형평성 문제,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의 미흡한 질적 수준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1997~2002년의 국민의 정부는 보육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보육시설의 인가규정을 보고제로 전환함으로써 영세하고 부실한 민간시설의 양산을 가중시켰다. 이 시기에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문제, 보육료 부담 등의 문제가 정책적 해결 과제로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체적 정책 사업은 추진되지 못하였다.

2) 2003년 ~ 2007년의 보육정책

2003년에 들어와 보육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보편성과 공공성을 지닌 영역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차등보육료 지원제도가 도입되어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권 확대 정책이 추진되었다. 5년간 연평균 35%의 보육재정 확대, 평가인증시스템 등 관리감독 시스템 도입, 보육정보센터 등 보육행정전달 인프라 확충사업, 국가수준의 보육과정과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여성가족부, 2006;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a; 2007b; 2007c)은 보육료 경감과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된 중요한 정책 사업이었다. 이 시기에는 정부의 보육 관련 공식 문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여성가족부, 2006b; 유희정 외, 2006;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a) 이전의 정부와는 달리 진보적 보육정책 추진의 의지가 자주 표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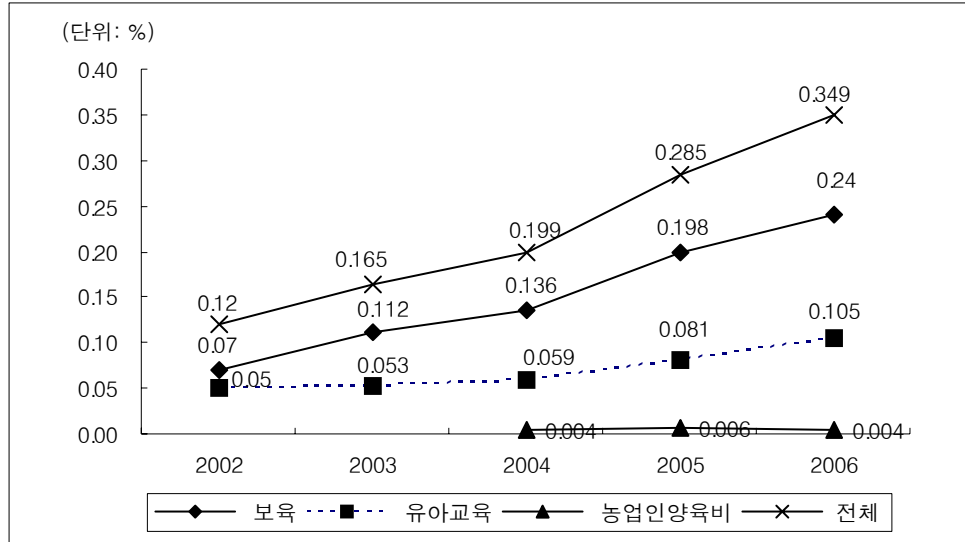
그 외에도 이 시기의 중요한 보육정책 사업 가운데 하나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모두 포함한 정책 데이터의 수집과 육아정책 추진목표 지표를 설정한 작업이다. 보육정책 추진이 주요 정책지표를 통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시기에 설정된 구체적 정책목표였던 1)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2)서비스 이용비용 경감, 3) 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목표 별 정책 성과 지표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2003-2007년의 보육정책 주요 지표

정책목표	정책 지표
보육시설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공급: 5년간 8700개소 증가 ▷ 국공립 보육시설 공급과 점유율: 5년간 418개 국공립시설 설치 2002년 국공립보육시설 점유율 6.0%에서 2006년에는 5.6%로 감소, 국공립시설 이용 이동 수는 5년간 14,000명 증가 ▷ 보육시설 이용 이동 수: 5년간 29만명 증가
보육비용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지원예산: 국비와 지방비 포함, 2003년 약 4,790억에서 2008년 2조9623억으로 연평균 35% 증가, 5년간 5배 증액 ▷ GDP 대비 육아지원예산 비율: 2002년대비 2006년 4배 증가 ▷ 소득별 차등보육료지원: 2002년 저소득층 106,000명에서 2007년, 563,000명으로 5배 증가 ▷ 영아보육기본보조금지원; 2005년부터 추진 민간보육 이용 영아 전체 대상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관리감독 강화: 2005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2007년 12월 50%이상 보육시설 참여 ▷ 시설 안전 강화: 육아시설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지원 예산 5년간 20배 증액, 관계법령 강화로 물리적 환경 개선 유도 ▷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 시기 보육 재정 확충과 보육이동 수의 증가,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 표준보육과정의 보급, 보육종사자자격 국가자격관리 제도도입, 보육행정력 강화, 부모를 포함한 시민사회의 보육정책 참여제도도입, 정책 데이터 수집과 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은 OECD의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제안들과 부합하는 정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보육 이동 수는 29만 명이 증가하여 3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보육시설 이용 이동수의 증가는 한국에서도 보육시설이 점차 보편적인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성과 보편성을 지닌 보육과 교육활동을 경험하는 아동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GDP 대비 영유아보육교육 재정은 2002년 0.12%에서 2006년에 0.35%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재정 규모가 충분하지는 못하였으나 연차별 보육 예산의 상승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보육예산을 포함한 육아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율



보육재정 확충과 서비스 질 관리 정책 등에서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과 같은 대단히 중요한 보육정책 지표들은 아주 미흡한 수준에 머물렀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주력하였다고는 하나, 정책성과를 내기에는 부분적이고, 불충분한 지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하겠다.

3) 현 정부(2008년 이후)의 보육정책 기조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이전과는 다른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가 발표한 보육정책에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자율결정 신고방식 으로의 변경”과 “보육료 자율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육정책은 “수요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장 기능 활성화와 보육료 자율화” 정책으로 변화되었으며, “부모체감도 제고를 위한 바우처 도입”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보육정책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시장의 기능 활성화’에 의하여 제고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인식이 나타나 있다(표 4 참조).

〈표 3〉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 수요자중심 보육정책 개편 관련 내용

과제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문제: 정부지원예산증가불구 부모체감도 낮음 ○ 정책패러다임전환: 시설중심지원에서 수요자중심으로, 저소득층 무상보육, 포괄적서비스/중산층이상 부모선택권 존중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료지원체계 개편: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 통합 일원화지원체계 구축 ○ 보육시설 이용시간 이원화:기본형과 연장형 구분 지원단가 산정 ○ 모취업여부 등에 따라 이용단가 차별화 ○ 부모직접지원 전자바우처 도입 ○ 서비스 질적수준 유지: 평가인증제도 수정보완 ○ 보육료자율화: 보육시설 자율 결정후 신고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 ○ 서비스 다양화: 국공립보육시설 중심 시간제 보육기회 확대, 가정내 파견사업 확대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양육부담경감으로 출산율제고, 취업부모 지원확대로 여성경제활동 증가 ○ 바우처 형식의 부모직접지원으로 부모 체감도, 소비자 선택권 증가 ○ 시장 기능 활성화로 민간시설 서비스 질 향상

아울러,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백서에는 “소득계층에 따라”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 선택권이 달리 적용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저소득층 자녀는 국공립시설에, 중산층 이상의 부모에게는 시설 선택권을 확대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 방향을 암시한다. 이러한 정책을 보육을 보편성을 지닌 공공서비스로 보려는 이전의 정책기조와 다르다.

현 정부의 ‘능동적 복지 2008 실천계획’ 중 보육관련 추가 설명자료(보건복지가족부, 2008, 3.25)에 의하면,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의 최우선 사업은 전자바우처 지원제도이다. 이 자료는, 전자바우처 지급 방식이 부모의 정부지원 체감도 제고와 보육행정의 효율성, 투명성 강화 효과, 수요자 욕구 반영, 소비자 선택권 확대, 수요자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육시장구조 형성,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검토보고서는 보육재정 지원은 부모직접 지원 방식보다는 시설(서비스)지원 방식이 전문교사의 채용, 관리감독권의 확보 등,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정책임을 제안하고 있다. 전자 바우처 지원 방식으로의 보육료 지원 방식의 변경은 2008년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2009년의 시행령 개정으로 현실화되었다(표 4 참조).

〈표 4〉 2008년 12월 양육수당 및 바우처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

내용	개정 이유 및 기대효과
양육수당 (34조의 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이용 아동만을 지원대상으로 삼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음. ○ 보육시설과 유치원 미이용아동에 대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보육서비스 이용권 (34조의 3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지원은 부모의 보육료 수혜체감도가 낮고, 보육료신청, 지급, 정산업무 복잡하여 개선 필요. ○ 보육시설 행정처리 부담 경감, 지자체 행정 및 민원부담 감소기대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신설 조항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보육정책 대상을 시설 미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아동으로 규정하고,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양육수당)의 근거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형평성 논리로 도입되었으나, 보육시설 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아이사랑플랜 2009-2012’이라는 명칭으로 보육정책의 방향과 사업을 공표하였다. 추진내용은 ‘자녀양육 비용부담 경감, 맞춤형보육서비스 제공, 보육교사 지원,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지원체계 수립’으로 설명되어 있어 다소 추상적이다. 다만 아이사랑플랜 추진 소요예산 자료를 보면, 4년간 11조 8천억 정도를 투입하여 2.4배의 예산이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는 가정 내 양육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을 위한 1조 6천억 규모의 예산이 ‘계획’되어 있다. 그에 비해 보육의 보편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현 정부 보육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보육이 제도화된 이후 초기 10여년은 극히 제한된 지원 정책을 견지하였으나, 2003년 이후 5년간은 이전 보다 적극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보육서비스의 보편성을 증대하고, 성과는 불충분하지만 공공 보육시설 확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가격규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정부개입을 증가시키고, 시설지원을 유지하면서 아동별 지원을 유예하는 등, 일정 부분 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8년 출범한 현 정부의 보육정책 관련 공식 발표 자료와 관련 예산, 주요 추진사업 계획 등을 고찰해보면,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제고 시키는 정책이 아닌, 소비자 선택과 보육시장 친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 변화의 근거와 주요 내용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첫째,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기보다는 ‘수요자의 선택과 책임’으로 간주하려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에게 보육시설 선택권을 확대해 주는 것

으로 설명되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바우처로 특정 보육시설을 선택하는 것은 부모의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선택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게 된다. 자율적 선택을 한 부모는 서비스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국공립시설에 수요가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바우처 제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지 의문이다.

둘째, 현 정부 보육정책은 부분적으로, 보육시설 이용보다는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OECD는 보육이 영유아에게 보편적인 학습과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등 육아시설 미이용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육시설 이용자와 미이용자간 정부 지원의 형평성을 기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저소득 계층의 아동에게 질적 교육경험 기회를 박탈하고 가정양육을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양육수당으로 인해 인생초기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다면 이 제도는 아동 초기 교육경험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과 배치된다. 양육수당은 다수의 국가에서 육아시설 미이용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용과 관계없이 별도의 아동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양육수당제도가 필요하다면 육아시설 이용여부와는 별도로 저소득 계층에게 부가적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째, 보육을 보편적 공공서비스가 아닌 잔여적 서비스와 민간시장 서비스로 개념화하는 정책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정부가 공식적 문건에서 ‘공보육 기반조성’(여성가족부, 2006)을 목표로 하면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려했다면, 현 정부는 일부에게는 잔여적 복지서비스로, 그 외에는 민간보육 확대 정책에 의한 선택권 강화정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현 정부 들어 발표된 문건 어디에서도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용어를 찾을 수 없다. 그야말로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개념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자녀와 장애아 등 특수 계층에 대해 국공립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일반 부모들은 민간보육시장을 활용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책이 추진된다면, 보육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내용이 부모의 소득 계층별로 차별화되고, 공공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시혜적 서비스 시설로 그 성격이 변화될 것이다. OECD 영유아보육교육 검토단이 영유아 대상별 서비스 차별화를 의도적으로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한 것과 배치되는 정책기조이다.

넷째, 재정지원 방식이 서비스시설 지원에서 부모직접 지원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은 민간보육 시장 활성화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현 정부 보육정책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우처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수요자 체감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OECD도 지적하였듯이, 그 때문에 부모직접 지원방식은 정치인이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보육의 질적 수준 요소인 교사수준 향상과 관리감독 강화는 재정지원이 시설에 제공되지 않으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부모가 정부로부터 지급된 바우처로 시설을 선택하는 구조에서는 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OECD, 2006).

다섯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과 추진실적, 서울시의 서울형어린이집 사업 등은 국공립 보육시설 등의 공공 보육시설 확대를 포기한 보육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신정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2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내놓으면서, 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된 기능을 국공립보육시설이 수행하도록 특화시켜 나갈 계획을 발표하였다. 통계자료(육아정책개발센터, 2008)에 의하면 2008년 12월 현재의 국공립 보육시설은 1,769개소로서, 2007년의 1,748개소에서 21개소 증가에 그쳤다. 이전 정부는 연간 400개소의 국공립보육시설 증설을 목표로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간 국공립보육시설 418개소 증설에 그친 바 있다. 이대로라면 향후 민간보육시설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이전 정부가 강조했던 보육의 보편성, 공공성 개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정책이다. 양육수당과 같이 보육수요자 감소 유도과 소득계층별 이용시설 차별화, 수요자 직접 지원, 공공보육시설 확충 유보와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사업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사업들은 보육의 보편성과 공공성 제고가 아니라 잔여적 복지사업이거나 보육의 시장화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V. 맺는 말

출산을 제고와, 아동발달, 미래인적자원의 육성, 여성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보육은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 영역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해야할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보육의 시장화를 지양하고, 공공 영역으로서의 보육 개념을 기본으로 한 보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정부는 속도가 다소 지체되더라도 보육이 영유아에게 보편적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보육시장 기능의 활성화로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성공률 기대할 수 없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서비스 질과 이용료 문제 등이 보육의 시장화로 해결된 사례가 없다.

둘째, 진정한 의미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이란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접근성 제고, 이용부담의 경감 등에 효과가 있는 정책을 말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요자의 정부지원 체감도만을 의식하여 바우처 제도에 몰입하기보다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평가인증 등 서비스 관리제도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육아재정의 확충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펴는 것이다.

셋째, 보육서비스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이 부모에 대한 지원보다 정책효과가 크다.

OECD(2006)의 영유아보육·교육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모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으로 선호되는 정책이지만, 서비스 시설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는 정책효과가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건비 지원에 의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육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하고 있다. 당장의 정치적 효과가 있는 수요자 지원 보다는 장기적으로 질적 보육에 성과가 있는 시설지원(인건비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동시에,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보육은 국공립 보육시설 증설 없이는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없이는 보육에 관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견이 많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의 존재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서 가장 성공한 보육정책일 수 있다. 대다수 부모들이 이용을 원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는 국비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75%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인증, 회계규정은 물론, 표준적 프로그램 운영과 규정 준수 등, 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우량 민간시설에 대해서만 국공립시설에 준하는 재정지원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그 외의 민간보육시설과 차별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제고는 반드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다섯째,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정부차체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시행 중인 보육정책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 그 실효성을 평가하여 지속적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과학적 데이터와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보육정책 사업들의 목표와 사업을 재점검하여 공공재로서의 보육 개념에 충실한 정책 사업들을 선택, 확대해야 한다. 이에, 보육시설을 어떻게 유형화해 나갈 것인가. 보육대상 아동을 어떻게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 비용지원을 계획할 것인가. 보육시설 관련 종사자의 관리와 수급은 어떻게 예상되며, 처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보육시설의 질 관리 인프라는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분담과 보육비용 지원 방식은 중장기에 걸쳐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을 포함한다. 장기적으로 성과가 기대되는 보육정책 사업들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끝으로, 보육을 포함한 육아지원이 부분적으로는 추진되어서는 정책효과가 거의 없다. 프랑스는 GDP의 4% 이상을 육아관련 재정에 할애하면서 포괄적, 전면적 육아지원정책을 시행한 결과, 유럽 최저 수준의 출산력에서 벗어나 최고의 출산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 한다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이며 ‘전면적’인 보호와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육아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5). 60차 국정과제회의 제2차 육아정책방안.
-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육아분야작업반 (2008).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사회복지육아.
- 김선희(2007). 여성노동현장에 나타난 저출산 현상. 한국-노르웨이 국제세미나 자료집, -일과 가정의 양립. pp.105~121.
- 보건복지가족부(2008). 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보건복지가족부.
- 여성가족부(2006). 새싹플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여성가족부.
- 유희정·김은설·유은영(2006). 육아지원기관의 공공성 제고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a).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정부문헌.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b).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통계.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7c).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학위논문/학술대회자료.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개발센터(2008). 한국의 육아정책백서. 육아정책개발센터.
- 정재훈(2008). 최근 독일 가족정책 변화의 시사점. 젠더리뷰. 2008 봄, pp.70~74.
-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백서.
- 홍현호(2009). 2010년 정부예산안 평가과 재정건전화 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론회 자료집.
- Brennan, D.(2002). Australia: Child care and state-centered feminism in a liberal welfare regime. In S. Michel &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Routledge, New York · London.
- Cancian, F. Kurz, D. London, A. Reviere R. & Tuominen, M.(2002). *Child Care and Inequality*. Taylor & Francis Books, Inc. Routledge. London.
- Cunha, F. Heckman, J. Lochner L., & Masterov, D.(2005). Interpreting the Evidence of Life-Cycle Skill Formation, IZA Discussion Paper Series, No 1575,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ur, Bonn, Germany.
- d'Addio, A. and d'Ercole, M.(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rate: The role of policy. A Paper Presented i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Jensen, J.(2002). Against the current: Child care and family policy in Quebec. In S. Michel & R. Mahon (Eds.), *Child Care Policy at the Crossroads*, Routledge, New York · London.
- OECD(2006b).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MEMO

MEMO

MEMO
